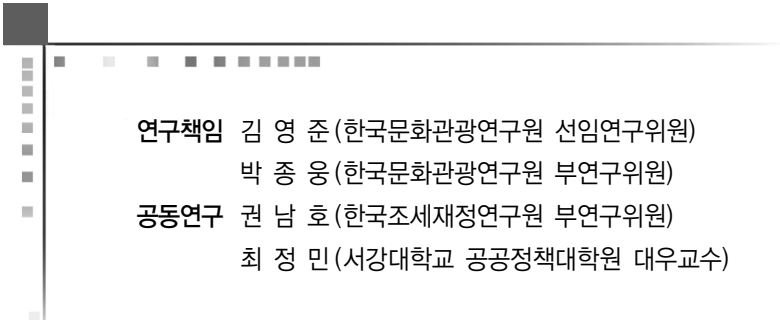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영준·박종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영 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종 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권 남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정 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서 문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노년 빈곤층 증가 등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적 사회 이슈가 존재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판단 대립, 지출구조조정 요구 등 적실성 있는 재정 지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 상황에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문화관광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분야의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연구는 선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사업에 대한 연구는 이 보고서가 거의 최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수시연구라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재정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문화·관광 재정사업의 평가 영역을 정립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역량 제고 및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관리기반 정비의 구체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문화·관광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에 있어 일정 역할을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자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



1. 서 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재정사업 평가의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타 부처와 같이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체평가는 개별 재정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의 개선이 제기되어 왔음
-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재정사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경주되고 있음
- 문화·관광 재정의 내실화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

2)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구축방안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첫째, 재정사업의 평가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재정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둘째,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주체의 효율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 방안 제시

□ 셋째, 재정사업 평가 관리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

- 통합적 평가체계를 정립·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평가내용 및 평가절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각종 자료의 분석 시점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되, 2018년 중 연구과정중 변화가 이루어진 현황은 별도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내용적 범위

-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법규별, 단계별, 평가별, 재정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개별법에 의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체평가 중 재정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도출함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자문 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연구 수행

- 문헌 연구: 국내·외 재정 성과 관리, 재정 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 평가 체계 개선 중심의 선행 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 진행
- 자문회의 및 인터뷰: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 등) 자문 회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의견 조사: 문화·관광 재생사업평가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진행
 - 재정사업 평가 담당 공무원, 평가 지원 기관 임직원, 정부 평가 전문가 등 40인

2. 정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가. 재정 성과 관리 및 사업 평가 체계

1) 재정 성과 관리 체계

□ 성과 관리의 배경 및 개념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 평가 등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였음
-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목표 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는 2003년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 다양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무조정실의 2018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 체계는 주체별로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됨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는 평가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함

□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 개요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참여정부(2003년)로부터 시작, 발전되어 국가 재정법(2006년)의 도입으로 제도적으로 안착함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로 도입
-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20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2006년)로 구성

□ 재정성과평가제도 현황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도로 매년 중앙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부시행정부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조하여 도입한 제도로 매년 성과계획서에 표기되는 성과관리대상사업의 1/3을 체크리스트 지표로 점검하는 리뷰방식 평가임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매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재정사업(군)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2) 재정사업 평가 현황

□ 재정사업 평가의 개념

- 재정사업평가는 재정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그 효과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재정사업 평가라 함

- 「국가재정법」 제8조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재정평가
 -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 재정사업 평가의 현황

-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사전, 집행, 사후 단계로 구분 가능한데, 주로 사전단계와 사후단계에 이루어짐
- 재정사업 사전 평가제도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하는데, 국가재정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위주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국비·지방비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이 있음
- 재정사업 집행 평가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이행한 사업 중 총사업비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등이 있음
- 재정사업 사후 평가제도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재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및 기금 운용 평가가 있음
-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평가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발전위원회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있음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근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계량분석 등 과학적 기법) 및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

가’를 수행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에 의해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수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하는 ‘R&D평가’를 수행함

나. 부처별 평가체계

1) 농림축산식품부

① 자체평가

□ 체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음
- 2017년 자체평가 평가지표 6개 항목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1개의 관리과제가 지정됨

□ 조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은 자체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제18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제19조)

□ 제도

- 근거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음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체계

- 성과평가는 자체평가가 수행되기 이전에 실시되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의 주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이며, 원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
- 성과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율평가가 예산되는 재정사업을 선정한 후, 각 개별사업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율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사업 관리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사업 관리단계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신규 점검 수행이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지표의 단기 목표달성 평가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

□ 조직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농식품정책성과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식품정책성과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제도

- 근거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장은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제99조는 전담기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

① 자체평가

□ 체계

- 자체평가 평가방향을 아래와 같이 규정(국토교통부, 2018.1)
 -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협업과제 지속 추진, 계획이행의 충실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원점수로 변경, 평가의 대응성 및 투명성 강화, 과제내용 중심의 난이도 평가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는 과제난이도, 과제이행노력도, 과제 목표달성도와 가감점 항목인 정책우수과제, 국정과제·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분됨
- 자체평가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은 2017년도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총 107개 평가대상 부서의 100개 과제임

□ 조직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며, 이 경우 구성

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제도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② 국토계획평가

□ 체계

-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
- 국토계획평가의 평가절차는 단계별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계획수립권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등 참여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에 있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 친환경성을 반영하여 6개 평가기준이 적용됨
 - 평가기준은 ① 지역경쟁력, ② 지역 간 균형발전,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조직

- 「국토기본법」 제18조 제4항은 국토계획평가의 전문기관 의뢰를 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가 설치되어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 제도

- 「국토기본법」 제3장의 제18조,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국토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연계성 확보를 위해 추진
 -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③ 지역개발사업평가

□ 체계

-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국토의 과도한 개발차단 및 국비지원 효과성 제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도입(2014년)
- 평가체계는 크게 사전평가, 집행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로 구분됨
- 사전평가: 실현가능성 검증과 단위사업 사전 타당성 평가로 구분
- 집행평가: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집행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해당 사업별로 국비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역개발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한 사례집 작성

□ 조직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4년부터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주택연구원에 지원 업무를 전담

하게 하고 있음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평가와 지역개발사업 공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제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제66조는 각각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명시
-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령(28097)과 시행규칙(00167)이 제정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15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

3) 보건복지부

① 자체평가

□ 체계

-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자체평가위원회」 분과위원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의 적절성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침
- 대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공정성 제고
 - 분야별 각 1일 씩 대면 평가를 시행하여 충분한 과제별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별 평가 실시
- 평가대상은 총 74개 과제이며 평가지표는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견인할 수 있게 구성

□ 조직

-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지원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미래전략연구실 사회보장평가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사업 평가를 전담하고 있음

□ 제도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특정평가,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

②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

□ 체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 점진적으로 사업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
- 사업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보조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

□ 조직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의 제4호와 제6호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의 직접적인 근거가 있음
 -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제도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평가 고도화, 건강증진 기금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민간보조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주요사업목적으

로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을 근거로 함

다. 시사점

□ 재정사업 평가에서 부처 자체평가 강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부처 자율로 지출구조 조정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변화는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평가 결과가 재정사업의 개선으로 환류 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 부처별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강구 중

-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 요구에 따라 부처별로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절차 개선, 지원전담기구 운영, 관련 지침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재정사업 전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중임
-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평가 운영의 충실화와 체계화를 기하고 있으며, 둘째,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 지원전담기구 운영

- 보건복지부의 경우, 재정운용담당관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이 통합재정사업보고서의 검토와 예비평가를 추진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선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하여 부처 내 재정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체계

가.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현황

1) 문화·관광 재정 현황

- 문화·관광 재정규모는 3조 408억 원, 문체부 예산의 57.9% 규모
- 문체부의 총 재정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5조 2,578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분야 1조 6,387억 원(31.2%), 콘텐츠 분야 7,140억 원(13.6%), 관광 분야 1조 4,021억 원(26.7%), 체육 분야 1조 1,850억 원(22.5%) 등임
- 2017년 기준으로 29개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고보조사업을 운영 중인 상위 5개 부처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임

2) 문화·관광 평가체계

① 재정사업평가

□ 자체평가

-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를 말하며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제8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자체평가위원회 8인(내부2인, 외부 6인)으로 구성
- 2018년 평가 대상사업은 '17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전체 성과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R&D, 지특사업, 책임운영기관사업, 소액사업(10억 미만)은 제외함
-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금 예산의 존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18년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금 예산의 존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18년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규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00억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사전적으로 신규보조사업의 사업내실화, 재정건전성 기여
- 적격성 심사는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송부하는 과정을 거침

□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층평가

- 기금 운용 평가는 사업운영평가와 자산운영평가로 구분되며 전자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자의 평가와 준치 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성과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계획 통보를 정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내부평가를 기금사업실적보고서,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 사업성과평가로 구분하고 함

②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평가

-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평가 중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영향평가,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 박물관 평가 인증제, 미술관 평가 인증제,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도서관 운영평가를 들 수 있음

나. 전문가 의견 조사

- 본 조사는 2018년 10월 5일(금) ~ 12일(금) 까지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내용은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평가체계의 실태, 부처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 등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 실태,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향, 부처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필요성,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관련 자유 의견 조사 진행

다.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특성상 체계적 관리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재정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5조2,578억 원에 달하며, 예산은 이 중 54.6%로서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기금은 45.4%를 차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재원이 다양하고, 보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재정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내 실무부서 중심의 자율평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평가는 근거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 평가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사업 메타평가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모두 ‘보통’ 수준으로 ‘우수’와 ‘미흡’ 사이에 위치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개선 필요 의견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5점 척도, 3점 보통)에서, 평가 설계와 평가 실행 자체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문화예술 등 사업별 특성화된 성과지표 개발 미흡 등 평가체계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됨

4.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가. 기본 방향

1)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 통합적 문화·관광 정책 성과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규모가 1조 1,518억 원('18년)에 달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 관리가 중시되고 있으나, 성과평가체계는 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등 한계를 지님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실질적 사업 개선에 환류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영역을 범주화하여 정례적으로 평가하며, 다각적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처 자율평가 체계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05년 도입되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의 개선과 직접 연계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재정사업 자율 평가 등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부처 내 평가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평가구조가 확립되어야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 문화·관광 재정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기획, 집행, 관리를 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집행·관리하는 체계이므로 정부의 사전 검증,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가 요구됨
- 정부 업무의 지방이양 가속화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2) 평가체계 개선 방향

□ 자율성: 부처 중심의 자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확립하여야 하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효율성: 재정사업 평가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심층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실무 부서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 부서의 기획 조정기능이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평가프로세스를 적정화, 효율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조직이 요구됨

□ 효과성: 평가결과의 실질적 사업 환류체계 구축

- 현재 재정사업의 평가가 사후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면서 실제 사업 단위의 개선이 가능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사업군 별로 정례적인 심층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군별 특성화된 성과지표 관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3) 평가체계 개선 방안

□ 평가 체계의 고도화: 기존 재정사업 평가 절차 확립

-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체계화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효율화와 평가결과의 내실화를 도모
-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사업군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형식으로 기획평가를 시행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각종 재정평가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 평가의 최소화, 평가 관리비용 절감 등 도모

□ 평가 결과의 실효화: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 사업 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 평가 관리 요구
- 강화된 제반 평가체계에 따라 제시된 사업평가 결과는 사업추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사업 환류 촉진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자체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절차의 체계화: 재정사업 평가 관리 근거 마련

- 정책평가의 영역, 절차와 방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군 별 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는 개별 근거법에 명시하되, 전체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성 있게 추진하도록 설정
-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평가를 통합하여 사업단위의 평가를 심층화·종합화 하되, 평가결과는 평가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체계화 도모

나. 재정사업 평가체계 정립

1) 필요성

-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효과 창출을 위하여 상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재정사업 관리체계 정립
 - 재정사업 자율평가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객관적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실제 사업 개선에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 거버넌스 재정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사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 기획하고, 심층 평가하여 사업 개선에 환류 함으로써 일상적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정립

2) 추진방안

① 자체평가 개선

- 자체평가는 단계별 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별 협력 동기를 부여하며,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체계 개선
-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의 평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지원 업무를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에서 주관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위원회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평가절차를 합리화하여 평가 추진

② 심층(기획)평가 도입

□ 평가대상

-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전체가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

야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심층평가 도입 초기에는 예산사업의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은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 집행, 사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재정평가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재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후 단계 사업 위주로 평가

□ 평가방법

-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 따라 진행
 - 심층평가는 사업군의 평가가능성을 판단한 후 가능성이 확보되었다면 사업군의 논리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평가 방법 및 방향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함
 - 적절성 분석은 사업의 정부개입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며, 효과성 분석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 성과 분석은 인과논리 검토, 집행체계 분석, 정책 수정 노력 분석을 수행

다.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1) 필요성

□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구 도입

-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관리체계라는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지원 기능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에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기구를 도입하

여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함

2) 추진방안

① 지원기구의 역할

□ 주요 업무

- 지원기구의 기본적 운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부처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인지, 부서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업무 범위는 평가 지원, 평가 결과 관리,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진 방법

- ‘평가 지원’ 업무 중 재정사업 통합평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체 시행하던 통합평가를 [그림 4-3]과 같이 지원기구와 역할 분담하여 시행

② 지원기구의 운영 형태

-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는 운영 효율성과 기존 운영사례를 감안할 때, 별도 법인 설치와 기존 조직 활용, 두 가지 대안을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첫 번째 대안은 재정사업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인 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인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있음
 - 두 번째 대안은 기존 조직에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있음

③ 지원기구의 조직 구성

- 지원기구(가칭 ‘문화체육관광 기획 평가센터’)는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등 외부 지원 조직과 평가기획팀, 평가(지원)팀, 평가관리팀 등 평가 지원을 수행하는 내부 전담 조직으로 구성

라.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마련

1) 필요성

□ 재정사업 평가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에 걸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지침과 별도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 운영 필요

2) 추진방안

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와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사업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재정사업 ‘평가와 환류’라는 ‘장’을 신설하여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함으로써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평가와 환류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와 평가결과가 해당 재정사업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차를 명시함

- 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자율평가계획 수립, 자율평가 절차, 후속 조치, 환류, 재정사업 평가 대응, 모니터링, 전담기관 활용 등

② 개별법 개선

-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개별법에서 강조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내 평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관광특구, 도서관, 문화영향평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경우에만 대상과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중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부문별 모법에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 성과관리를 도모하여야 함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도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은 무엇인지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자원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5. 결론 및 향후 과제

가. 결론

-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단계별로 사전, 집행, 사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단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적격성 심사 등, 사후단계는 재정사업 통합평가,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기금 운용평가 등이 해당함

- 이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적격성 심사 와 재정사업 통합평가, 기금 운용평가이며, 이외의 평가 제도는 기 재부와 재정 평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큰 흐름은 부처 자체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자 율적 재정사업 개선을 유도하는 것인데, '18년부터 재정사업 통합평 가 중 메타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명실상부한 부처 주도의 자율평가 제도로 변경되었음

나. 향후 과제

- 정부 성과평가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부터 다양한 제도 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중복을 저감하는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임
- 현실적인 평가체계 운용상의 어려움은 부처 내 평가업무에 많은 인 력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인데, 재정사업 평가 담당자의 평가부담 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평가담당자의 전문직제를 검토하고, 평가 대상을 축소하며, 적절한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전무 한 실정에서 타 부처의 사례와 타분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한 결과물로서,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구 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정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9
제1절 재정 성과 관리 및 사업 평가 체계	11
1. 재정 성과 관리 체계	11
2. 재정사업 평가 현황	17
제2절 부처별 평가체계	23
1. 농림축산식품부	23
2. 국토교통부	32
3. 보건복지부	42
제3절 시사점	50
 제3장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체계	 53
제1절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현황	55
1. 문화·관광 재정 현황	55
2. 문화·관광 평가체계	58
제2절 전문가 의견 조사	71
1. 조사 개요	71
2. 조사 결과	71
제3절 시사점	79

제4장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81
제1절 기본 방향	83
1.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83
2. 평가체계 개선 방향	86
3. 평가체계 개선 방안	88
제2절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정립	91
1. 필요성	91
2. 추진방안	92
제3절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97
1. 필요성	97
2. 추진방안	98
제4절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마련	105
1. 필요성	105
2. 추진방안	106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3
제1절 결론	115
제2절 향후 과제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부록	 129

표 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6
〈표 2-1〉 재정성과 평가제도	16
〈표 2-2〉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18
〈표 2-3〉 재정사업 사전 평가제도	19
〈표 2-4〉 재정사업 집행 평가제도	20
〈표 2-5〉 재정사업 사후 평가제도	21
〈표 2-6〉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자체평가의 지표	23
〈표 2-7〉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의 주요내용	28
〈표 2-8〉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29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 성과평가 내용	31
〈표 2-10〉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32
〈표 2-11〉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대상인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	36
〈표 2-1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국토계획평가, 지역개발사업평가 내용 ..	41
〈표 2-13〉 자체평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	43
〈표 2-1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용	49
〈표 2-1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내용	52
〈표 3-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 규모	55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재원별 지출 총괄	56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소관실국별 예산 지출 총괄	56
〈표 3-4〉 중앙부처 부처별 국고보조금 상위 5개 부처 현황(2017)	57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추진 절차 및 일정	59
〈표 3-6〉 주요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	60
〈표 3-7〉 보조사업의 타당성(70점)	61
〈표 3-8〉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30점)	62
〈표 3-9〉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점수	64
〈표 3-10〉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평가지표	66
〈표 3-1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대상	67
〈표 3-12〉 개별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평가	69
〈표 3-13〉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72
〈표 3-14〉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의견 제시	72

CONTENTS

〈표 3-15〉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 강화 필요성	73
〈표 3-16〉 재정사업 개선 필요성	74
〈표 3-17〉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추가적 개선방안	74
〈표 3-18〉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 강화 필요성	75
〈표 3-19〉 재정사업 재원에 따른 심층평가 필요성	75
〈표 3-20〉 재정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75
〈표 3-21〉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 필요성	76
〈표 3-22〉 재정사업 별도 전담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필요성	77
〈표 3-23〉 재정사업 평가 관련한 근거에 대한 관련법규 제정	77
〈표 3-24〉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관련한 자유의견	78
〈표 4-1〉 재정사업 자체평가 개선방향	92
〈표 4-2〉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지원 방식	98
〈표 4-3〉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주요 업무	99
〈표 4-4〉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대안별 비교	103
〈표 4-5〉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내용	106
〈표 4-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내용	107
〈표 4-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평가 및 환류 관련 내용	108
〈표 4-8〉 문화체육관광 평가 관련 주요 제도 현황	11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체계	13
[그림 2-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절차	33
[그림 2-3]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35
[그림 2-4]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39
[그림 2-5]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42
[그림 2-6]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리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2-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리의 추진절차	47
[그림 4-1]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	87
[그림 4-2] 심층(기획)평가 흐름도	96
[그림 4-3] 재정사업 자체평가 지원 흐름도	101
[그림 4-4] 재정사업 평가관리 흐름도	101
[그림 4-5] 재정사업 지원기구 조직 구성	104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연구 배경

- 정부는 새로운 재정 수요 증가와 지출 구조 조정 요구에 따라 재정 관리를 효율화·적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음
 - 우리나라 재정 성과 관리제도는 재정사업 성과목표제도(200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200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2006년) 도입으로 재정사업 평가체계 마련
 -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대한 부처의 인식 확산 및 성과 정보의 공개 확대로 재정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지속 추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전면 개편(2018년)으로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부처 내 평가 역량 제고와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율평가제도’를 사업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계적·일률적인 지출 구조 조정 계획 수립을 지양
 - 기존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재정당국-사업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 등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핵심평가제도¹⁾’ 도입

1) 핵심사업 평가대상: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등

- 재정사업 평가의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타 부처와 같이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음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자체평가는 개별 재정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의 개선이 제기되어 왔음
 - 세출 구조 조정 목적의 재정 평가로는 사업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평가결과의 도출이 어려워 부처의 성과관리 및 개별 사업의 개선 환류에 한계 내포
 - 한편, 지역발전사업의 지자체 이양 본격화 등 재정사업 평가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재정사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경주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17년 기준 보조사업이 3.8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 부처의 5위에 해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은 심층평가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평가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사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관광 재정의 내실화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검토 필요
 - 타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체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가지 구축방안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재정사업의 효과 제고 등 정책 성과 관리 측면에서 사업 평가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 검토
 - 문화·관광 재정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an entire evaluation system) 강화 필요성과 방향 제시
- 첫째, 재정사업의 평가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재정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평가의 객관성과 결과의 구체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평가 업무의 중복성을 저감할 수 있는 절차 및 체계 검토
- 둘째,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주체의 효율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 방안 제시
 - 부처별 재정사업의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외부 평가 지원 전담기관의 사례를 검토
- 셋째, 재정사업 평가 관리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
 - 통합적 평가체계를 정립·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평가내용 및 평가절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부처별 지침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검토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각종 자료의 분석 시점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되, 2018년 중 연구과정중 변화가 이루어진 현황은 별도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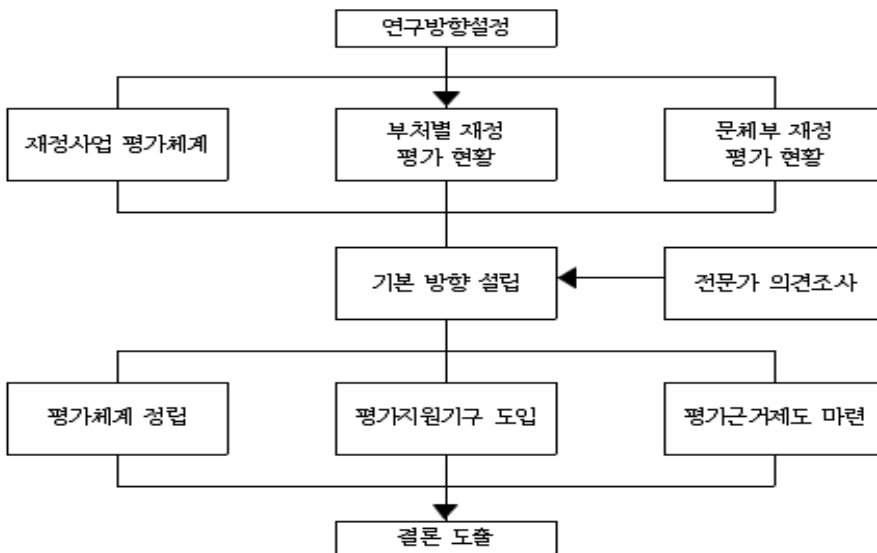
- 평가체계란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적 관심사는 평가체계의 기본요소인 평가 대상(what), 조직(who), 제도(how) 등에 있음
-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법규별, 단계별, 평가별, 재정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1-1>과 같이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개별법에 의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체평가 중 재정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도출함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유형		
법규별	정부업무평가법	국가재정법	개별 법
단계별	사전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
평가별	기금운영평가	국가보조사업운용평가	재정사업통합평가
재정별	R&D 사업	균형발전 사업	일반재정 사업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자문 회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연구 수행
 - 문헌 연구: 국내·외 재정 성과 관리, 재정 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중심의 선행 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 진행
 - 자문회의 및 인터뷰: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 등) 자문 회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의견 조사: 문화관광 재성사업평가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진행
 - 재정사업 평가 담당 공무원, 평가 지원 기관 임직원, 정부 평가 전문가 등 40인
 - 연구 전체 순서는 [그림 1-1]의 연구 흐름도와 같음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

정부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제1절

재정 성과 관리 및 사업 평가 체계

1. 재정 성과 관리 체계

가. 성과 관리의 배경 및 개념

- 1970년대 주요국의 작은 정부에 대한 고민으로 촉발된 공공영역에 대한 성과관리는 1990년대 우리나라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였음
 - 1970년대 후반부터 주요국들은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음
 -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관리제도(Performance Management)가 도입됨
 -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경영의 논리와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 노력 지속
 - 기존에 민간부문에서만 활용되었던 성과관리제도가 공공부문에 도입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성과측정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 평가 등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였음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책의 결과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주어진 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등의 투입과 집행 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

-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 배분, 그리고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함(국무조정실, 2008)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미리 제시하고,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목표 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는 2003년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운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 다양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 40개 부처 555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면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각종 평가의 증가로 2006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기능이 통합·운영됨
- 국무조정실의 2018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체계는 주체별로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됨
 -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 자체평가로 구분
 - 공공기관평가는 개별법에 의한 평가로 구분됨

- 정부업무평가 체계는 [그림 2-1]과 같은데,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는 평가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함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정책, 재정 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평가 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3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자체평가 (44개) *43+국조실	<div> <div>주요정책(성과관리)</div> <div> <div>일반재정사업</div> <div>R&D평가</div> <div>재난안전</div> <div>균형발전</div> <div>조직</div> <div>인사</div> <div>정보화</div> </div> </div> <div>재정사업</div> <div>행정관리역량</div>	<div>정부업무평가법</div> <div>국가재정법</div> <div>연구성과평가법</div> <div>재난안전법</div> <div>국가균형발전법</div> <div>정부업무평가법</div>	<div>국조실</div> <div>기재부</div> <div>과학기술정보통신부</div> <div>행안부</div> <div>지역위</div> <div>행안부</div> <div>인사처</div> <div>행안부</div>
지방 자치 단체	부처평가	합동평가(24개 부처) 개별평가(50개 부처)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등 주관부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공공 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공공기관운영법	기재부
	기금(준치평가 34개, 자산운용평가 46개)		국가재정법	기재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6개)	<div>과기연 소관(25개)</div> <div>과기정통부 산하(16개)</div> <div>해수부 산하(3개)</div> <div>원안위 산하(1개)</div> <div>방사청 산하(1개)</div>	<div>과학기술기본법</div> <div>과기출연기관법</div>	<div>과기연</div> <div>과기정통부</div> <div>해수부</div> <div>원안위</div> <div>방사청</div>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경인사연
	지방공기업(343개)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출처: 국무조정실(2018)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체계

나.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 개요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참여정부(2003년)로부터 시작, 발전되어 국가재정법(2006년)의 도입으로 제도적으로 안착함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2005년), Top Down 예산제도(2004년), 재정성과평가제도(2003년), 재정정보 회계시스템(2006년)으로 구성
 - 재정정보시스템(dBrain, 2007년), 발생주의 예산제도(2010년) 도입
-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2005년²⁾),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2006년)로 구성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성 향상

다. 재정성과평가제도 현황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재정사업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일상적 관리’ 기능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3년 주기로 재정사업별 구체적 성과를 점검하는 ‘정기 검진’ 기능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재정운용 상 문제가 발생한 개별사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정밀 검사’의 기능 담당(유승현·윤기웅·공동성, 2015: 3)

2) 2000년~2002년의 시범사업 진행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도로 매년 중앙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 중앙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³⁾, 성과보고서 작성 → 기획재정부(확인) → 국회 제출 → 국민에게 보고(공개)의 과정을 거침
 - 지속적 개선을 통해 예산분류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일치, 성과관리 대상사업 간소화, 성과보고서와 재정사업통합평가보고서 통합 추진⁴⁾(오영민, 2017: 3-4)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부시행정부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조하여 도입한 제도로 매년 성과계획서에 표기되는 성과관리대상사업의 1/3을 체크리스트 지표로 점검하는 리뷰방식 평가임
 - 일선 부처가 1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평가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점수를 확정
 -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일률적인 예산삭감, 평가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여 평가수행체계 분권화, 평가결과와의 환류 개선, 평가체계 통합, 평가대상 확대됨⁵⁾(오영민, 2017: 6-7)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매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재정사업(군)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3) 성과계획서에는 '비전-미션-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으로 성과관리체계 제시

4) ① 2014년 예산체계의 불일치 및 부처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성과계획서의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를 예산분류체계인 프로그램 단위 사업에 각각 매칭시켜 예산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일원화 ② 2016년 성과관리 실익이 적은 신규사업 행정지원사업 소규모사업 평가중복사업 등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1,636개 성과관리 대상수를 1,372로 축소

5) ① 2015년 개별 사업평가는 부처에 위임 ② 2015년 미흡 이하 사업 10% 자동예산삭감 방식에서 평가대상 사업예산 1%내에서 부처 자율의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방식으로 전환

- 범부처 사업과 재정제도에 대한 평가 필요성, 평가선정의 임의성 및 일정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 평가수행 지침 및 기준의 재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함(오영민, 2017: 8)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용으로 요약됨

<표 2-1> 재정성과 평가제도

구분	재정성과 목표 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도입시기	2003년	2005년	2006년
대상사업	전체 재정사업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 주기 평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사업군
내용	성과계획서 성과 목표·지표 관리 성과보고서 상 달성도 측정·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사업 전반에 걸친 정밀 분석
추진실적	55개 부처 2,000여 개 사업	매년 500여개 사업	매년 10여개 사업 및 사업군

자료: 유승현·윤기웅·공동성(2015), p.4.

2. 재정사업 평가 현황

가. 재정사업 평가의 개념

- 재정사업평가는 재정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그 효과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재정사업 평가라 함(국회예산정책처, 2016: 9)
 - ‘재정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정부는 재정사업을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으로 구분하며 일반재정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23개 유형으로 세분함⁶⁾
 - 앞의 [그림 2-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재정사업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일부임⁷⁾
- 「국가재정법」 제8조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제50조의 타당성재조사와 같은 평가제도를 가지고 있음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재정평가(홍종현, 2015: 3429)
 -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정

6) 현실적으로 재정사업평가라 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일반재정사업평가를 통칭

7)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 의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요 정책과제 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규제개혁평가(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 등) 등이 해당됨⁸⁾
-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재정평가도 다수 존재⁹⁾

나. 재정사업 평가의 현황

1) 추진 단계별 재정사업평가 현황

-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사전, 집행, 사후 단계로 구분 가능한데, 아래 <표 2-2>와 같이 주로 사전단계와 사후단계에 이루어짐

<표 2-2>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구분	사전	집행	사후
예산 관리	예산 편성 (예산안)	집행 (총사업비 관리)	결산 (결산보고서)
성과평가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적격성 심사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재정사업 통합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포함)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금 운용평가

자료: 박노욱(2015), p.3, 재작성

- 8)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4대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농림수산업 성과평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청년실업대책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 평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사책 평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풍수해보험 가입률 평가 등이 있음
- 9)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지방재정법 제54~55조), 지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경영평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평가(친시장 지방세 지원계획) 등이 있음

- 재정사업 사전 평가제도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하는데, 국가재정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위주의 지방 재정투자사업 심사, 국비·지방비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이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 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 적격성 심사는 신규 보조사업 도입 시 국가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적격성 심사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음

<표 2-3> 재정사업 사전 평가제도

구분	근거법령	대상	주최/주관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등 - 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중앙: 시·도의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시·군·구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투자 관리센터)
적격성 심사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지침 제10조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소관부처/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 재정사업 집행 평가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이행한 사업 중 총사업비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등이 있음
-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에 따라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검토할 경우 실시하는 평가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함
-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재심사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음

<표 2-4> 재정사업 집행 평가제도

구분	근거법령	대상	주최/주관
타당성 재조사	국가재정법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관리대상 중 총사업비 대비 10~20% 이상 증가 - 수요예측치 30% 이상 감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지방채 발행액 30% 이상 증가,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투자 관리센터)

- 재정사업 사후 평가제도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재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및 기금 운용 평가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재부는 핵심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로 개편(메타 평가 폐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는 201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에 따라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제외하여 자체·상위 평가(중간평가/종료평가/추적평가) 진행
-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모든 포괄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는데,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지자체 자체평가 후 지역위에서 메타평가,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지자체 자체평가 후 지역위 직접평가 시행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 자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재정이 집행의 관점에서 평가
- 기금 운용평가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금 운용평가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음

<표 2-5> 재정사업 사후 평가제도

구분	근거법령	대상	주최/주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가재정법 제8조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사업(2017년 기준, 1,415개)	소관부처 (모든 사업) 기획재정부 (주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 주기 도래 사업	소관부처 (자체 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상위 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9조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 (2017년 기준, 880개 사업)	지자체→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지역사 업평가센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 중 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사업, 포괄보조금 편성사업 이외의 모든 보조사업	기획재정부
기금 운용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	- 사업운영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기금 - 자산운용평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운용 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소관부처 (사업운영평가) 기획재정부 (자산운용평가)

2) 평가 주체별 재정사업평가 유형

-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평가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발전위원회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있음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근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계량분석 등 과학적 기법) 및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조사업연장평가’를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복권위원회)은 「국가재정법」 제82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의해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를 수행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에 의해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수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하는 ‘R&D평가’를 수행함

제2절

부처별 평가체계

1. 농림축산식품부

가. 자체평가

1) 체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고 있음
- 2017년 자체평가 평가지표 6개 항목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1개의 관리과제가 지정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적실성 및 의사소통 노력도, 성과 지표 달성도, 정책의 효과성, 환류 노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2-6>의 내용 참조
 - 2017년도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201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51개 관리과제가 평가범위 혹은 대상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6>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자체평가의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수립의 적절성 (10점)	○ 계획수립의 충실성	- 통계·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수립의 필요성 검토 여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소통을 실시 여부
	○ 사업지원요건의 적절성	- 재정지원 체계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 사전 분석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 사업의 추진방식,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를 확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집행과정의 적절성 및 의사소통 노력도 (25점)	○ 자원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및 협업 노력도	선택 1	-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자원대상자의 적정성 확보 여부 - 대상자 정절차 및 자금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여부 - 관련기관·정책 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 여부, 정보공유·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여부
	○ 관련기관·정책 간의 협업노력도		- 관련기관·정책 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 여부, 정보공유·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여부
	○ 추진일정관리 실적	선택 1	- 성과관리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 준수 및 적시 집행 여부
	○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도		- 주기적인 현장 확인·점검 및 소통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시에 대응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30점)	○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평가)	선택 1	- 성과목표의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 달성도 (정성평가)		- 목표치 적응성, 달성여부 및 정책효과 정도를 확인
정책의 효과성 (25점)	○ 정책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선택 1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정책효과 발생 및 파급성		- 과제가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장기적으로 목표한 효과 발생 또는 지속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정책수행을 통해 민주성, 능률성, 경제성, 고객만족, 긍정적 외부효과 등 주요 행정가치 및 직접목표 외의 성과
환류노력도 (10점)	○ 정책 환류 노력도		- 종합적인 자체분석 및 외부기관 지적 등 수렴노력 여부
가·감점 (±3점)	○ 외부평가 결과, 홍보실적 등		- 정책 수행을 통해 고객만족, 외부효과 등 주요 행정 가치 제고 성과가 있는 경우 -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 우수사례 실적직접 목표외의 성과가 있는 경우
	○ 과제난이도		- 과제 난이도에 따라 가·감점 부여
계		6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8)

2) 조직

- 2018년 1월 2일 전부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은 자체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함
-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됨

○ 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제18조)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헬

○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제19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도

○ 근거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회의,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73)」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1) 체계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서 2005년부터 내부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는 농식품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성과평가는 자체평가가 수행되기 이전에 실시되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의 주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이며, 원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2)
- 성과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율평가가 예산되는 재정사업을 선정한 후, 각 개별사업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율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공통지표 11개+정보화 사업용 2개)에 따라 실시
 -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는 평가대상 사업 수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의 11개 지표를 관리 및 결과단계의 4개 지표로 축소하였음
- 평가의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사업의 개요(예산, 사업기간, 지원대상 및 조건, 시행주체 등)를 살펴보고,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의 성과평가, 종합평가 순서로 구성되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5), 세부 항목은 <표 2-7>과 같음
- 사업 관리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사업 관리단계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신규 점검 수행이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지표의 단기 목표달성 평가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
 - 성과지표의 단기 목표달성 평가는 재정사업, 핵심과제, 보조사업 등 관련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성 정도,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 현황을 점검하고, 타 부처의 유사사업 지표를 참조하여 성과지표의 개선가능여부를 살펴봄
 - 효과성 분석의 경우 대규모이며 지속적인 미흡사업을 선별하여,

전문가들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함

-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제언 및 신규사업을 제안함

〈표 2-7〉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의 주요내용

1. '평가대상사업' 개요
 - 사업예산, 사업기간, 지원 대상형태조건, 시행주체 등
2. '평가대상사업' 관리의 적절성 평가
 - 사업모니터링 여부 및 현장점검 결과
3. '평가대상사업' 성과 평가
 - 3.1. 성과지표의 단기 목표달성 평가
 - 3.1.1.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성
 - 유사사업 및 과거 성과지표 검토
 - 3.1.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의 합리성
 - 3.1.3. 성과지표 개선 가능성 검토
 - 3.2. '평가대상사업' 효과성 분석
 - 3.2.1. 평가 방법
 - 3.2.2. '평가대상사업' 효과 분석
4. '평가대상사업' 종합평가
 - 정책 및 신규사업 제언
 - 유사사업 통폐합 등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12: 6)

- 평가 범위(대상사업)은 2017년 성과평가의 대상사업은 총 25개로, 2018년 재정평가 대상 및 기초통계보완분야를 기반으로 선정
- 평가 대상사업의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FTA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다양함
 - 평가 대상사업의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FTA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다양함
 -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중 2018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대상사업에서 2014년 이후 사전평가 미실시, 해당부서의 수요,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 사업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심층평가는 최근 3년 사업성과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하거나 현장조사·설문 등 추가 자료를 수집 혹은 보완하여야 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축산업경쟁력제고, 양곡매입 및 관리 등 7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세부 대상은 <표 2-8>과 같음

〈표 2-8〉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연번	회계구분	단위사업명	예산(억 원)	분야
1	FTA기금	과수및원예경쟁력제고	2,021	일반재정
2	농안기금	농산물가격안정및수급조절	6,387	일반재정
3	양특회계	양곡매입및관리	13,749	일반재정
4	축발기금	친환경축산	2,132	일반재정
5	축발기금	축산업경쟁력제고(1)	5,241	일반재정
6	FTA기금	축산업경쟁력제고(2)	200	일반재정
7	농지기금	대단위농업개발및시설장비	1,156	일반재정
8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	1,549	일반재정
9	축발기금	축산기술보급	524	일반재정
10	농특회계	농촌지역개발(1)	704	일반재정
11	농특회계	농촌지역개발(2)	145	일반재정
12	농지기금	농지은행(농지,용지)	6,906	일반재정
13	농특회계	식품산업육성(1)	383	일반재정
14	농안기금	식품산업육성(2)	1,424	일반재정
15	농특회계	경쟁력제고	384	일반재정
16	농특회계	농업관측	83	일반재정
17	농안기금	종자수급조절	634	일반재정
18	FTA기금	종자경쟁력제고	93	일반재정
19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438	일반재정
20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정보화,책임운영)	12	일반재정
21	일반회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경비	26	일반재정
22	일반회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5	일반재정
23	농특회계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55	일반재정
24	농지기금	농지관리정보화	19	일반재정
25	농특회계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4	일반재정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12: 3-4)

2) 조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농식품정책 성과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정책 추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전문적 성과평가·분석의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b)
-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는 ① 주요 정책 분야, ② 재정사업 분야, ③ 규제 개선 분야, ④ 홍보 등 기타 성과관리 업무 등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식품정책 성과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8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약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위탁하였음

3) 제도

○ 근거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¹⁰⁾ 제8장은 자율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제99조는 전담기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73)」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646)」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0) 2018년 1월 2일 전부개정

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 성과평가 내용 정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성과 관리 기본 규정」을 통해 자체평가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체계, 조직, 제도 등은 <표 2-9>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함
- 조직의 경우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추진하지만, 성과평가의 경우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를 통해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 성과평가 내용

구분	자체평가	성과평가
체계	(평가대상)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	(평가대상) - 자체평가 대상 사업 중 선정 (사전평가적 성격)
	(평가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소위원회: 평가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목적	(평가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전평가의 성격 - 최근 3년 사업성과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하거나 현장조사·설문 등 추가 자료를 수집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 실시
	(평가기준)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집행과정의 적절성 및 의사소통 노력도 - 성과지표 달성도 - 정책의 효과성 - 환류노력도 - 가감점: 외부평가 결과, 홍보실적 등 / 과제 난이도	(평가기준) - 사업관리의 적절성 - 사업의 성과 평가 - 종합평가
	(자율성)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2/3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평가 전담기관을 규정
조직	- 자체평가위원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제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토교통부

가. 자체평가

1) 체계

- 자체평가 평가방향을 아래와 같이 규정(국토교통부, 2018.1)
 -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협업과제 지속 추진
 - 계획이행의 충실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원점수로 변경
 - 평가의 대응성 및 투명성 강화
 - 과제내용 중심의 난이도 평가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는 과제의난이도, 과제이행노력도, 과제 목표달성도와 가감점 항목인 정책우수과제, 국정과제·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분됨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의 내용은 <표 2-10>와 같음
- 자체평가의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은 2017년도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총 107개 평가대상 부서의 100개 과제임(국토교통부, 2018.1)¹¹⁾

〈표 2-10〉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100)		평가시기
과제 난이도	- 성과지표의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법 제정 등) 	30		'17.10
과제 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20	35	'18.1
	-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여건·상황변화에 대응 정도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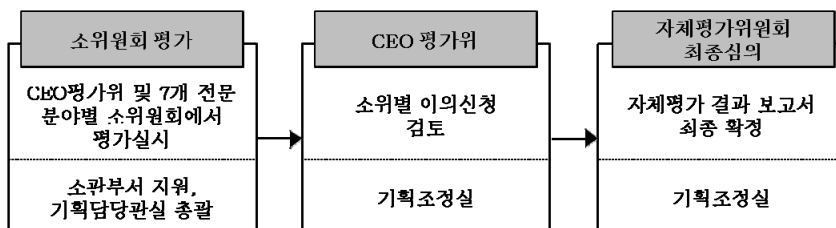
11) 2017년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자체평가 결과 사업별 등급은 매우우수 5개(5%), 우수 15개(15%), 다소 우수 15개(15%), 보통 30개(30%), 다소 미흡 15개(15%), 미흡 15개(15%), 부진 5개(5%)로 나타남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100)	평가시기
과제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20	35
	- 정책효과 발생정도 (CEO·협업과제는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	15 (10)	
	- 정책만족도 (CEO·협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CEO·협업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및 인지도 정도	(5)	
평가항목	가점항목			
정책우수과제 (최대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업무 평가에서 우수과제, 핵심관리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가점부여- 정책우수과제(최대 2점), 핵심관리과제(최대 2점)- 그룹핑된 과제는 개별과제의 비중대로 가점배분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정도(최대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과의 관련 과제에 감점(-2점)○ 시행계획에는 반영했으나, 당초 보고된 내용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경우→해당과제에 감점(-1점)			

출처: 국토교통부(2018.1)

2) 조직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국토, 주택, 건설·수자원, 교통, 도로·철도, 항공 등 전문 분야별로 7개의 소위원회(소위별 3~5명 위원 구성)를 구성·운영함
 - 소위원장들로 구성된 CEO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CEO과제를 소위와 별도로 통합평가하고 소위별 이의신청을 최종 조정함



출처: 국토교통부(2018.1)

[그림 2-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절차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 평가 실시되며, 2017년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평가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자체평가위원회는 2017년 10월 난이도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 1월에 과제이행 노력도 및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를 수행함
 - CEO평가위에서 먼저 CEO·협업과제를 평가(CEO 25개, 협업 10개)한 후 각 소위별로 실국장과제를 평가함
 -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CEO평가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함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며,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동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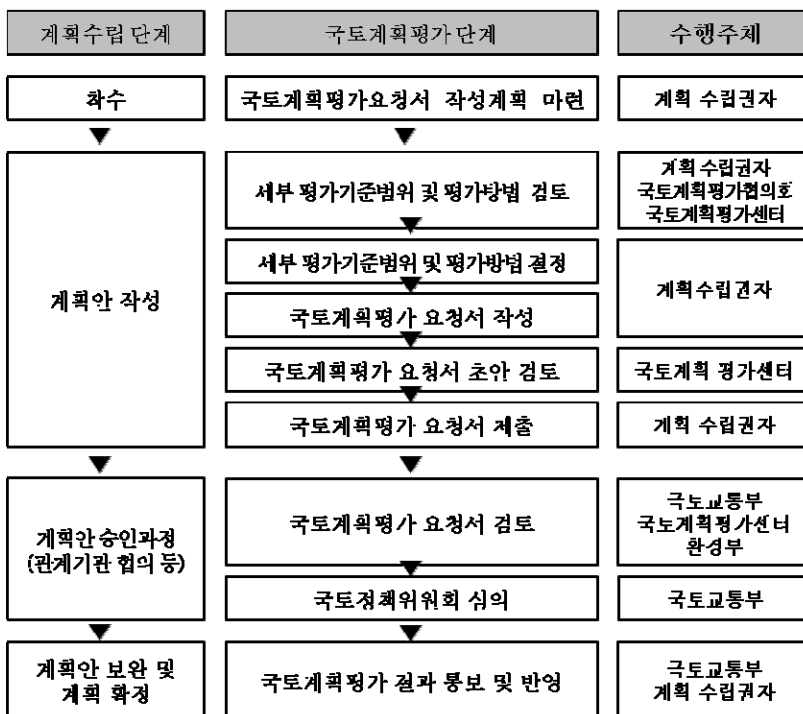
3) 제도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은 제13조에서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국토계획평가

1) 체계

-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
- 국토계획평가의 평가절차는 단계별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계획수립권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등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절차는 아래의 [그림 2-3]과 같음



출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2018.8.9)

[그림 2-3]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에 있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 친환경성을 반영하여 6개 평가기준이 적용됨
 - 평가기준은 ① 지역경쟁력, ② 지역 간 균형발전,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계획의 특성에 적합한 6대 평가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범위를 설정하여 자체평가 실시함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 평가기법은 정량적 기법, 정성적 기법으로 구분되며, 요청서 작성방식은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이 있음
 - 평가기법 중 정량적 기법은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이 활용됨
 - 정성적 기법은 전문가 의견 조사가 중심
-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은 크게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기간시설계획 11개, 부문별계획 12개로 구분되는데, 이 국토계획들이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범위 및 대상이 되며 아래의 <표 2-11>의 내용과 같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2018.8.9.)

<표 2-11>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대상인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구분	대상계획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 계획 (5개)	도종합계획	부문별 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해안권 및 내륙발전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산림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구분	대상계획	구분	대상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출처: 국토교통부(2018.8.9)

2) 조직

- 「국토기본법」 제18조 제4항은 국토계획평가의 전문기관 의뢰를 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가 설치되어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3) 제도

- 「국토기본법」 제3장의 제18조,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국토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연계성 확보를 위해 추진
 -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다. 지역개발사업평가

1) 체계

-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국토의 과도한 개발차단 및 국비지원 효과성 제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도입(2014년)
 - 지역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역량 및 지역정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가 매년 수행¹²⁾
- 평가체계는 크게 사전평가, 집행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로 구분됨(토지주택연구원, 2018: 153)
- 사전평가: 실현가능성 검증과 단위사업 사전 타당성 평가로 구분
 - 실현가능성 검증: 지역개발계획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시 계획안에 포함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
 - 단위사업 사전 타당성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승인 후 지자체가 신규로 국비를 신청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검토
- 집행평가: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집행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해당 사업별로 국비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역개발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한 사례집 작성

12) 수탁연구과제 형식으로 진행

○ 지역개발사업평가의 추진시기, 평가방식은 아래의 [그림 2-4]과 같음

구분	추진시기	평가방식	기대효과
사전 평가	개발계획 승인	실행가능성 검증 (계획 사전평가)	과도한계획 수립 차단
	단위사업 여상승인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사업 사전평가)	불요불급한 투자 방지
집행 평가	개발계획 운영	개발계획 집행평가 (계획 집행평가)	개발계획의 현행화 유도
	단위사업 시행	단위사업 집행평가 (사업 집행평가)	지자체의 사업역량 강화

출처: 토지주택연구원(2018:154)

[그림 2-4]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2) 조직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4년부터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주택연구원에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상 평가대행 전문기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타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에서는 지역 개발사업 평가와 지역개발사업 공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실행가능성 검증,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개발계획 집행평가, 단위사업 집행평가를 하고 있음

3) 제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제66조는 각각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명시
 - 동법 제65조와 제66조는 지역개발사업 평가 자체뿐 아니라,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 역시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
-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령(28097)과 시행규칙(00167)이 제정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15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
- 지역개발지원 업무지침 제10장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및 집행결과 평가’에서 ‘지역개발계획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489)」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국토계획평가, 지역개발사업평가 내용 정리

-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기본법, 시행령,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 다양한 제도의 강구를 통해 부처 내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평가체계, 조직, 제도는 아래의 <표 2-12>와 같음

<표 2-1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국토계획평가, 지역개발사업평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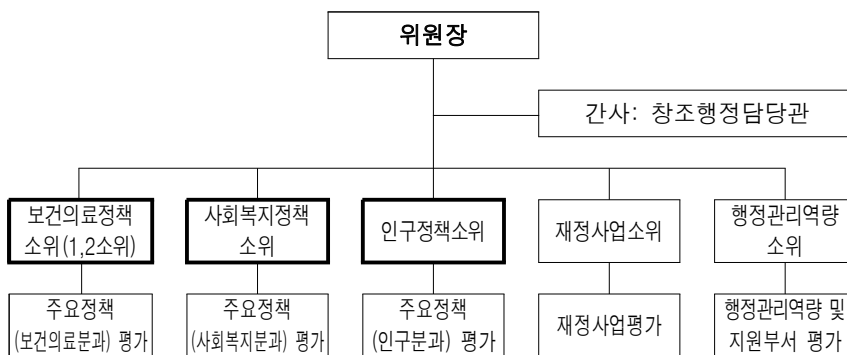
구분	자체평가	국토계획평가	지역개발사업평가
체계	(평가대상) - 평가대상 부서의 과제	(평가대상) - 중장기적·자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평가대상) - 지역개발계획 및 국비지원 단위사업
	(평가체계) - 소위원회 평가: 전문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CEO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신청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최종 심의·확정	(평가체계) - 계획착수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 계획안 작성 단계: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초안 검토·제출 - 계획안 승인과정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단계: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평가체계) - 사전평가: 실현가능성 검증(계획 사전평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사업 사전평가) - 집행평가: 개발계획 집행평가(계획 집행평가), 단위사업 집행평가(사업 집행평가)
	(평가기준) - 과제난이도 - 과제이행 노력도 - 과제목표달성도 - 가감점: 정책우수과제 / 국정과제·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평가기준) - 지역경쟁력 - 지역 간 균형발전 -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평가기준) - 사전평가: 실현가능성 검증,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 집행평가: 예산집행률, 추진조직 및 관리역량, 갈등 대처역량 등
	(자율성)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2/3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자율성)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의 평가 주도	(자율성) - 수탁연구과제 형식을 통해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의 평가 수행
조직	- 자체평가위원회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 - 국토교통부 - 계획수립권자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 환경부	-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
제도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지역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역 개발 및 자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보건복지부

가. 자체평가

1) 체계

-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자체평가위원회」 분과위원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의 적절성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침
- 대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공정성 제고
 - 분야별 각 1일 씩 대면 평가를 시행하여 충분한 과제별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별 평가 실시
 - 2017년 자체평가의 경우 내부위원 4인(실장급) 및 민간위원 24인(위원장 1인 포함), 총 28인으로 구성함¹³⁾
 - (소위원회) 주요정책(보건의료1,2·사회복지·인구),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총 6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의 [그림 2-5]와 같음



[그림 2-5]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13)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8.1월에 나온 보건복지부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1항을 근거로 28인으로 구성하였다고 명기함

- 평가대상은 총 74개 과제이며 평가지표는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견인할 수 있게 구성
-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는 아래의 <표 2-13>과 같음

<표 2-13> 자체평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 형성 (30)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5)	- 과제선정의 적절성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적절성(10)	-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의 충실성 - 타 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조정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성과지표 적절성(15)	-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 측정가능성, 자료타당성) - 목표치의 적극성
정책 집행 (30)	추진일정 충실성(10)	- 추진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소통 충실성(10)	- 홍보활동의 적극성 - 홍보 성과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10)	- 현장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정책 성과 (40)	성과지표 달성도(20)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목표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20)	-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 - 정책목표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 조직

-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지원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 연구센터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이 재정운용담당관을 대신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오윤섭 등, 2017)
- 성과계획서 작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자체 평가 전반에 걸쳐 실무지원단에서 총괄 진행함으로써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무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

-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미래전략연구실 사회보장평가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사업 평가를 전담하고 있음
- 사회보장평가 연구센터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설계, 사회보장제도 평가 DB 구축, 사회보장 기본계획 평가 및 제도 평가, 평가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 성과관리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3) 제도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특정평가,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4항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능, 회의, 소위원회,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수당 등의 지급, 비밀보호를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보건복지부 정책 등에 관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

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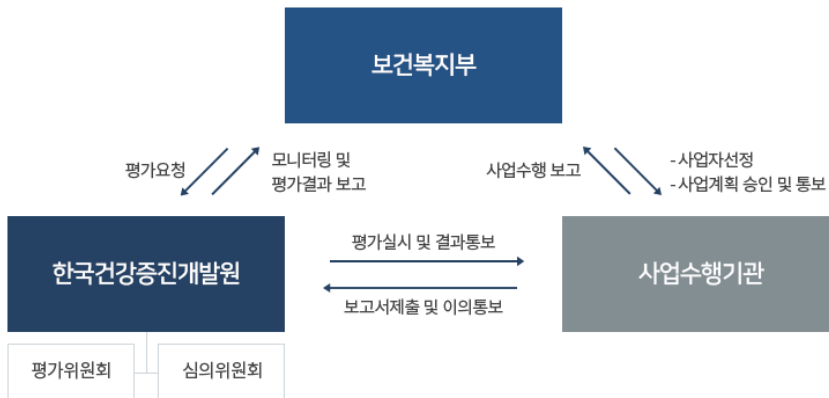
1) 체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사업¹⁴⁾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 점진적으로 사업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¹⁵⁾)
- 성과평가 관리는 크게 성과관리와 평가로 구분됨
 - 성과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설명회,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문가 강의와 컨설팅 등을 제공, 수행기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성과 지표 개발 및 민간보조사업 운영 등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
 - 평가: 사업종료 후 최종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계획에 반영함
- 사업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추진체계는 [그림 2-6] 와 같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4)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의 평가 수행에 대한 총괄, 민간보조사업 예산배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민간보조사업 수행 기본원칙 마련 등 관리 감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보조사업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성과관리 교육 및 평가설명회 개최, 사업평가 및 사업집행 개선조사 실시,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기술지원,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14) 2011년부터 시행

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IU00875&siteId=null>, 검색일자 2018. 8.1.

-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민간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수행, 성과 산출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2-6]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리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는 크게 계획, 성과평가, 환류 및 활용으로 구분되며 아래의 [그림 2-7]과 같음

- 계획: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발주부서에서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공모 선정을 말함
- 성과평가: 설명회 및 교육, 중간실적보고, 사업진행 개선조사·최종 보고서·정선보고서·사업성과물 등 제출, 최종평가의 절차를 말함
- 성과평가: 이의신청 및 심의, 환류 및 활용을 의미

구분	내용	주요내용
계획	사업자 공모 및 선정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발주 부서에서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사업자를 공모 선정
성과 평가	평가 설명회 및 교육 (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수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간실적보고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 상반기목표치 달성 현황, 예산집행률, 사업계획 이행률
	사업진행 개선조사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진행 개선조사 : 조사 부진사업 등에 대해 서면조사,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부처 및 사업수행 기관에 컨설팅 제공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성과물 등 제출('1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적)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성과물, 근거자료 제출 ▶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전문 기관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최종평가 ('1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도,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
성과 평가	이의신청 및 심의 ('1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대표자가 이의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1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흡과제 성과개선계획서 제출 추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사업자 선정 등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우수사업 포상 및 공유를 통한 사업의 질 향상 도모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5)

[그림 2-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리의 추진절차

○ 보건복지부,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대상사업 및 평가범위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상의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요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18b: 113-133)

- 국민건강증진계정: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28개 사업
- 공공보건의료계정: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운영 등 2개 사업

2) 조직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의 제4호와 제6호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의 직접적인 근거가 있음
 -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국민건강증진법(15339)」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자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5. 5. 18.>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3) 제도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평가 고도화, 건강증진 기금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민간보조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주요사업 목적으로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을 근거로 함

다.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용 정리

-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통해 부처 내 성과 관리는 추진하고 있음
- 평가대상, 평가체계, 평가기준 등은 아래의 <표 2-14>와 같음

<표 2-1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용

구분	자체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체계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평가대상)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상의 민간보조사업
	(평가체계) - 소위원회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총 6개 부문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 과제에 대한 업무설명회, 담당자-평가위원 간 대면심의 - 정량, 정성 평가 실시	(평가체계) - 계획: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성과평가: 평가 설명회 및 교육(상반기, 하반기), 중간실적보고, 사업집행 개선조사,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사업성과물 등 제출, 최종평가 - 환류 및 활용: 이의 신청 및 심의 평가결과 의 환류 및 활용
	(평가기준) - 정책형성: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정책집행: 추진일정 충실성, 정책소통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실성 - 정책성과: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기준) -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적절성 - 사업성과 및 확산의 효과성
	(자율성) -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 구성	(자율성) - 국민건강증진법은 평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평가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조직	- 자체평가위원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시사점

□ 재정사업 평가는 재원별, 단계별로 유형화 가능

- 정부업무평가는 특정 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와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행정관리역량 평가로 재구분 할 수 있음
-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적격성 심사 등이 있음
- 단계별로 사전평가는 주로 기획재정부가, 사후평가는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데, 사전평가는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는 지출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재정사업 평가에서 부처 자체평가 강화

-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기획재정부에서에서는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부처 자율로 지출구조 조정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변화는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평가 결과가 재정사업의 개선으로 환류 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 부처별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강구 중

-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 요구에 따라 부처별로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절차 개선, 지원전담기구 운영, 관련 지침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재정사업 전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중임
-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평가 운영의 충실화와 체계화를 기하고 있으며, 둘째,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 지원전담기구 운영

- 보건복지부의 경우, 재정운용담당관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 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이 통합재정사업보고서의 검토와 예비 평가를 추진하였음(오윤섭 등, 20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에서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소관부서를 대신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분과위원회 평가 이전에 미비점을 파악하고, 평가보고서를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개선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하여 부처 내 재정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자체평가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
-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내용

○ 3개 부처의 성과평가 내용을 체계, 조직, 제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 2-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1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내용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성과평가	자체평가	국토계획평가	지역개발 사업평가	자체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위원회 -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 식품부 자체평가 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전평가 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평가 - CEO평가 위원회 - 자체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착수 - 계획안 작성 - 계획안 승인과정 -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 - 집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성과평가 - 환류 및 활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식품 정책성과 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연구원 국토 계획평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주택 연구원 지역개발 사업평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위원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계획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 증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제1절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 현황

1. 문화·관광 재정 현황

□ 문화·관광 재정규모는 3조 408억 원, 문체부 예산의 57.9% 규모

○ 문체부의 총 재정지출 규모는 <표 3-1>과 같이 2018년 기준, 5조 2,578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분야 1조 6,387억 원(31.2%), 콘텐츠 분야 7,140억 원(13.6%), 관광 분야 1조 4,021억 원(26.7%), 체육 분야 1조 1,850억 원(22.5%) 등임

<표 3-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감	
총지출	56,971	100.0	52,578	100.0	△4,393	△7.7
문화예술	16,000	28.1	16,387	31.2	387	2.4
콘텐츠	7,430	13.0	7,140	13.6	△290	△3.9
관광	15,538	27.3	14,021	26.7	△1,517	△9.8
체육	15,021	26.4	11,850	22.5	△3,171	△21.1
문화행정	2,981	5.2	3,180	6.0	199	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 <표 3-2> 지출 총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지출 중 예산은 2조 8,692억 원(54.6%), 기금은 2조 3,885억 원(45.4%)을 차지하며, 예산 중 일반회계는 2조 208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7,769억 원,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461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599억 원임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자원별 지출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총지출	5,697,103	5,816,651	5,257,816	△558,835	△9.6
〈예산〉	2,905,508	2,954,931	2,869,298	△85,633	△2.9
일반회계	2,012,892	2,062,208	2,020,829	△41,379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71,200	71,307	71,490	183	0.3
지역발전특별회계	821,417	821,417	776,980	△44,437	△5.4
〈기금〉	2,791,594	2,861,719	2,388,518	△473,201	△16.5
문화예술진흥기금	228,226	228,226	246,164	17,938	7.9
영화발전기금	74,847	74,847	65,914	△8,933	△11.9
지역신문발전기금	9,207	9,207	8,308	△899	△9.8
언론진흥기금	23,197	23,195	23,132	△63	△0.3
관광진흥개발기금	1,058,575	1,128,700	959,990	△168,710	△14.9
국민체육진흥기금	1,397,544	1,397,544	1,085,010	△312,534	△2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소관실국별 예산 지출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212,564	1,227,811	1,151,851	△75,960	△6.2
문화		719,526	734,776	712,319	△22,457	△3.1
	일반회계	529,754	545,004	509,394	△35,610	△6.5
	지특회계	189,772	189,772	202,925	13,153	6.9
문화정책관	일반회계	75,109	75,109	82,103	6,994	9.3
예술정책관	일반회계	348,773	364,023	313,862	△50,161	△13.8
지역문화정책관	일반회계	105,872	105,872	113,429	7,557	7.1
	지특회계	189,772	189,772	202,925	13,153	6.9
관광		493,038	493,035	439,532	△53,503	△10.9
관광정책관·	일반회계	1,789	1,789	1,789	—	—
관광산업정책관	지특회계	491,249	491,246	437,743	△53,503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 <표 3-3>의 일반회계를 소관실국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는 1조 1,518억 원으로 문체부 예산중 40.1%를 차지하며, 문화분야는 7,123억 원으로 일반회계 비중이 높고 관광분야는 4,395억 원으로 지특회계 비중이 높음
- 2017년 기준으로 29개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을 운영 중이며 국고보조사업을 운영 중인 상위 5개 부처는 아래 <표 3-4>과 같이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임
- 보조금 재원은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상위 5개 부처의 재원 규모는 40.9조 원으로 전체 88.1%를 차지(이재원: 24)

<표 3-4> 중앙부처 부처별 국고보조금 상위 5개 부처 현황(2017)

(단위: %, 억 원)

부처별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합계	규모
보건복지부	87.1	3.3	0.6	20.2	57.7	268,037
환경부	-	11.6	49.6	15.4	9.4	43,626
국토교통부	5.7	23.2	4.5	9.4	8.5	39,272
농림축산식품부	-	21.0	34.5	14.4	8.8	40,679
문화체육관광부	0.5	12.1	0.2	17.9	2.1	9,702
소계	93.3	71.1	89.4	77.3	89.1	409,025

출처: 이재원(2018: 24) 재구성

2. 문화·관광 평가체계

가. 재정사업평가

1) 자체평가¹⁶⁾

-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를 말하며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제8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자체평가위원회 8인(내부2인, 외부 6인)으로 구성¹⁷⁾
- 2018년 평가 대상사업은 '17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전체 성과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R&D, 지특사업, 책임운영기관사업, 소액사업(10억 미만)은 제외함
 - 81개 사업: 일반재정 75개, 정보화 6개 사업이 해당됨
- 평가결과 산출을 위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사업별로 3단계 등급화하며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전체 상대평가: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사업에 대해 자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함
 - '미흡' 사업 가운데 사업의 특성·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

16) 자체평가와 자율평가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 스스로 하는 평가를 자체평가(법정용어)라 하고,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서 중심의 사업평가를 자율평가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17)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조에 의해 1.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 2.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의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자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정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

○ 2018년 자체평가 절차 및 일정은 아래의 <표 3-5>와 같음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일정	평가 단계	추진 내용 및 세부활동 계획
18.1월~ 18.2월 말	2017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초자료인 2017년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2.28까지)
▼		
3월 초~ 3월 중순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3.16.) - 평가대상사업 및 평가자침 설명
▼		
3월 중순~ 3월 말	사업별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대상 사업별 평가보고서 작성(담당부서)
▼		
3월 말~ 4월 초	평가자료 검토	○ 1차 검토: 평가담당조직 평가 - 평가자료 수정 및 보완 ○ 2차 검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서면평가)
▼		
4월 초~ 4월 중순	소명기회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담당부서 전달 -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4월 중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재개최 - 소명 자료에 대한 재평가 실시 - 평가등급 산정 (상대평가 준수)
▼		
4월 중순~ 4월 말	최종 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작성
▼		
4.28.~4.30.	평가결과 제출	○ 평가결과 최종 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계획

○ 2018년 현재 없어진 메타평가¹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평가를 통한 정책성과 달성도를 살펴볼 수 있음

18) 기획재정부 핵심평가로 변경됨

- 2017년 주요 부처의 메타평가의 결과는 아래의 <표 3-6>와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표 3-6> 주요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

부처명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국토부	보통	보통	보통
특허청	우수	-	-
농림축산식품부	보통	보통	보통
산림청	우수	보통	보통
환경부	보통	보통	보통
해양수산부	보통	우수	보통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보통	보통
문화재청	우수	-	-
통계청	우수	-	-
교육부	보통	보통	우수
보건복지부	보통	보통	보통
인사혁신처	우수	-	-

출처: 기획재정부(2017.5.22.) 보도자료

2) 보조사업 연장평가

-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짐
-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몰제 실시에 따라 평가시점에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계적 폐지 4개, 통폐합 8개 등 11.5% 예산 감축
- 보조사업의 관행적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연장여부 등을 평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조금 예산의 존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운용하며 이에 따르면 “보조금법 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표 3-7〉 보조사업의 타당성(70점)

평가항목	척안사항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4.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6.0)	①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0)	①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0)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업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소규모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소규모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고려
	중규모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출처: 기획재정부 2018 보조사업평가편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18년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보조사업 타당성은 위의 <표 3-7>의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함
 -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은 아래 <표 3-8>의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함

<표 3-8>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30점)

평가항목		착안사항
2-1 보조 사업자 선정 의 적정성 (10.0)	지자체 보조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민간 보조	①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자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①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 평가항목별로 정량평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정상추진’
 - 서면심사(1차평가): (1단계) 부처가 작성한 「기초조사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2단계) 기초조사보고서 및 추가 제출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1차 평가결과 도출

- 대면심사(2차평가): 1차 평가결과 및 이의제기서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별 대면평가 실시
 - 추가심사: 2차 평가결과(즉시폐지·단계적폐지·통폐합만 해당)에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총괄반이 추가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심사 실시
 -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평가단계별로 쟁점사항 정리, 평가결과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총괄팀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49건에 대한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19건, 사업방식 변경 19건, 감축 8건으로 평가('18년 존속기한(3년) 만료)

3)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규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00억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사전적으로 신규보조사업의 사업내실화, 재정건전성 기여
- 적격성 심사는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송부하는 과정을 거침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적격성 심사는 총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행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3-9>과 같음
 - 평가항목은 ① 사업 타당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③ 규모의 적정성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 배점배율을 5:3:2로 설정함

〈표 3-9〉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점수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가. 사업의 타당성 (50점)	1. 보조금 지급 제외 해당여부(5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 되는 지 여부(5점) ※ 해당될 경우 전체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판정
	2. 보조사업의 법적근거(5점)	보조사업의 근거 법령이 있는 지 여부, 관련 법령에 근거의 강도(추상적, 구체적 등) (5점)
	3. 보조사업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30점)	민간시장, 지자체 등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 (5점)
		지원 대상(지역, 계층 등), 지원방법(보조, 융자 등 보조이외의 방법 가능 여부), 사업내용(내역 등)의 적절성(10점) 사업목적과 일치하는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 그 수혜자의 범위가 특정 소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혜자가 있는 지 여부(10점)
		사업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5점)
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30점)	4. 유사중복 여부 (10점)	유사중복 여부 검토를 위한 보조사업 비교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5점)
		타 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5점) ※ 유사중복 비교표 활용
		사업수행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있는 지 여부, 사업주체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 여부 (10점)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5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5점)
다. 규모의 적정성 (20점)	5.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의 구체성(30점)	사업의 관리 계획과 체계가 갖춰져 있는 지 여부(현장조사, 정산확인, 사후관리 등)(5점)
		사업관리 및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을 감안 시 보조금의 규모가 적절한 지 여부(5점)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10점)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제시한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보조율 산정근거 등 제시) (10점)
		향후 재정소요가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10점)
다. 규모의 적정성 (20점)	6. 보조율의 합리성(10점)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10점)
	7.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10점)	향후 재정소요가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10점)

4) 문화예술흥기금 심층평가

- 기금 운용 평가는 사업운영평가와 자산운영평가로 구분되며 전자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자의 평가와 준치 평가는 기획재정
부에서 진행함

- 기금 사업운영평가는 매년 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기금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조사·평가 자료를 제공받아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평가¹⁹⁾
 - 기금 운용 평가와는 별도로 3년마다 시행하는 기금 준치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²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성과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평가계획 통보를 정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15638)」

제3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내부평가를 기금사업실적보고서,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 사업성과평가로 구분하고 함
- 기금사업실적보고서는 중앙부처의 성과보고서와 비슷한 형식이며,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는 복권기금의 문화나눔사업에 한정하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성과평가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형식 진행(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018.8.7)

19)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평가에 포함되어 탁월소형, 사업성 등급을 받았음

20)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준치 판정을 받은바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목적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역시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적정 배분 체계를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등 외부평가지표 연계 및 활용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3)

- 평가내용은 단위사업에서 세세부사업을 단위로 하여 계획-집행-성과의 연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 3-10>과 같음

<표 3-10>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기준치	평가방법
1.사업계획의 적정성(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3	- 비계량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 비계량
	1-3. 사업내용이 적당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4	- 비계량
2.성과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 비계량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	- 비계량
3.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 계량 - 비계량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 비계량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 비계량
4.목표달성서(3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 계량 - 비계량
5.정책효과성(20)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20	- 비계량
전체합계		10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3)

- 평가절차는 평가단 구성, 평가단 설명회, 서면평가, 현장실사(평가), 합의판정점수 및 최종의견서 취합, 평가점수 등급 심의 의결, 평가결과 종합, 최종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7-8)
- 평가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예술기금사업 심층평가를 총괄하고, 예술창작역량 강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등 3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세부 추진체계는 3개의 소위원회별로 심의조정(위원장), 세부점검(평가위원), 실무지원(간사) 등의 역할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심층평가 대상은 아래의 <표 3-11>과 같으며, 2016년 사업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2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2)

<표 3-11>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대상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비중 (%)	사업예산 (단위: 백만 원)	관리부서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3.0	3,080	문학지원부
		시각예술창작육성	3.1	3,200	시각예술부
		공연예술창작육성	20.6	21,110	공연지원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12.3	12,593	창의예술 인력센터
		국제예술 교류지원	1.1	1,100	국제교류부
		한국예술세계화	4.6	4,700	
예술가치 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2	1,200	기획조정부
		문화예술기부활성화	24.8	25,410	문화예술 후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4.2	4,255	국제교류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11.7	11,943	공연지원부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공연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	2.0	2,000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1.5	1,500	공연지원부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관광자원화	1.6	1,628	공연지원부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1.4	1,400	공연지원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3.7	3,800	공연지원부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3.3	3,382	공연지원부
3개	5개	16개	100.0	102,301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

나.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평가

-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평가 중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영향평가,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 박물관 평가 인증제, 미술관 평가 인증제,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도서관 운영평가를 들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 5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문화기본권·문화정체성·문화발전·특성화 지표 등에 따라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의 확산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 방안 등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도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이행,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에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중앙투자심사검토, 사전·집행·사후평가 및 컨설팅 실시함
- 박물관 평가 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공립박물관 운영 부실 등 문제점 개선, 박물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박물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시설, 사업, 예산현황, 보유 전문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미술관 평가 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공립미술관 운영 부실 등 문제점 개선, 미술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미술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사업, 예산현황, 보유 전문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공립미술관 건립운영 계획을 사전평가함으로써 사업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중도 포기 방지 및 운영 부실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공립미술관 신축,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사업을 대상으로 함.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조사, 3차 종합평가로 진행
- 도서관 운영평가는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제도로 단위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도서관서비스의 혁신 유도 및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 제공,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우수도서관 발굴, 포상을 진행함. 전 관종별 도서관(15,257개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2차 서면심사(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종합심사(위원회)로 진행
- 각 평가의 근거, 사업내용, 추진방식, 사후 활용의 내용은 아래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개별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평가

사업명 (내역사업)	근거	사업내용	추진 방식	사후활용 (인센티브 등)
문화영향평가	문화기본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평가내용: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문화기본권·문화정책성·문화발전·특성화 지표 등에 따라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의 확산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 방안 등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사업기간: '16~단년도 계속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대상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계획안 마련
지역관광개발 사업평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평가내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중앙투자심사검토 사전·집행·사후평가 및 컨설팅 실시 - '18년 평가사업 52개 계획(컨설팅 4개 포함) ○ 사업기간: 2018. 01. 01. ~ 2018. 12. 31.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추진 관리

사업명 (내역사업)	근거	사업내용	추진 방식	사후활용 (인센티브 등)
박물관진흥지원 (박물관 평가 인증제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국·공립박물관 운영 부실 등 문제점 개선 - 박물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박물관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내용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 (평가방법) 시설현황, 사업현황, 예산현황, 보유 전문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종합평가 ○ 사업기간: '18.8.~'18.12. 	직접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우수박물관 포상 - 미인증박물관 운영 지자체에 대한 신규 박물관 설립 규제
미술진흥기반 구축 (미술관 평가 인증제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국·공립미술관 운영 부실 등 문제점 개선 - 미술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박물관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내용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미술관 - (평가방법) 시설 사업 예산현황 및 보유 전문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종합평가 ○ 사업기간: '18.9~'19.3 	민간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우수미술 관 포상 - 미인증미술관 운영 지자체에 대한 신규 미술 관 설립 규제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 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공립미술관 건립운영 계획을 사전평가함으로써 사업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중도 포기 방지 및 운영부실 문제를 최소화 ○ 평가내용 - (평가대상)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의 공립 미술관 신축,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사업 - (평가방법)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조사, 3차 종합평가 ○ 사업기간: '18.4.~'18.11. 	민간 경상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박물관 난 립 방지 - 건립 국고지원 시 타당성 평가 자료로 활용
도서관운영 평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주요과제 등 단위도 서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 유도 -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 제공,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우수도서관 발굴, 포상 ○ 평가내용 - (평가대상) 전 관종별 도서관(15,257개관) - (평가방법)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2차 서면 심사(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종합심사 (위원회) ○ 사업기간: '18.5~'18.12 	민간 경상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도서관 포 상 및 해외 선진 도서관 견학 기 회제공

제2절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2018년 10월 5일(금) ~ 12일(금) 까지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중앙부처 공무원 17명, 공공기관 2명, 연구기관 8명, 학계 13명으로 총 40명이 전문가 의견 조사에 참여
- 조사 내용은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평가체계의 실태, 부처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 등으로 구성
-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는 6개의 대구분, 총 1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질문은 5점 척도(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임
 - 예를 들어, 5점 중 3점은 보통이며, 3점 이상이면 보통 이상으로 해석함
 -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보고서 부록 참조

2. 조사 결과

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설계의 타당성, 평가실행의 효율성, 평가관리의 효과성, 그리고 평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 평가설계와 평가실행 자체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평가설계의 타당성, 평가실행의 효율성, 평가관리의 효과성은 <표 3-13>과 같이 평균이 보통 이상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설계	성과관리계획의 합리성	40	3.60	0.78
	선정 기준의 적정성	40	3.45	0.85
	평가지표 항목 구성의 적절성	40	3.45	0.78
	평가지표 적용의 적합성	40	3.43	0.78
	평가과정의 공정성	40	3.93	0.86
평가실행	평가위원의 전문성	40	3.70	0.69
	평가지침의 적정성	40	3.58	0.84
	평가지원의 충분성	40	3.23	0.92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40	3.40	0.81
평가관리	평가결과의 사업 반영 정도	40	3.33	1.00
	사업모니터링 적정성	40	3.43	0.71
	평가관리지원DB의 적정성	40	3.20	0.82
	인센티브 제공의 적정성	40	2.85	1.05
	관련 제도적 근거의 명확성	40	3.35	1.05

-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방형 의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 3-14>와 같이 평가체계가 문화체육관광 재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4〉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의견 제시

- 균형발전위원회 평가체계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평가제도와의 부합, 연계성
- 문화체육관광정책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 비중이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반영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정책 대상인 '문화'의 특성 고려 및 반영
- 문체부 내부의 평가관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정도가 중요
- 사업 효과의 계량화가 쉽지 않음

- 기재부 추진 평가, 문체부 실국 자체 추진 평가 등 유사한 성격의 평가가 일원화, 정교화 되지 못하며, 평가의 종류가 많음
- 다양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표준화하기 어려움
- 평가대상 담당자 인식부족으로 자료준비 부실과 사업의 형식적 답변으로 평가 이하의 점수 발생
- 사업별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 위원이나 지침의 일방적 기준에 따라 사업 성격과 별개로 무조건 정량적 지표를 설정해야 함에 따라 억지스런 목표나 맞지 않는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확대
- 일관성 있는 평가 체계 유지 필요
- 재정사업 평가목표가 지정되고 수 년 동안 수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정책 및 사업 환경이 변경되어 재정목표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경직된 목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정목표의 현실성 부족 시에는 적극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관리체계 변경이 필요함

나.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 강화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3-15>를 보면 평균 3.78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표 3-15〉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 강화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 강화 필요성	40	3.78	0.95

- <표 3-16>에서 재정사업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관리 등 부분별로 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평균 3.6이상으로, 각 부분이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
- 평가관리에서 ‘평가 인센티브 강화’는 평균 4.10으로 특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평가결과의 사업 개선, 재정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부진사업 컨설팅 강화 등의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평가계획과 실행부분보다 평가관리 부분의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표 3-16〉 재정사업 개선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평가계획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내실화	40	3.73	0.88
	평가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40	3.65	0.86
	성과지표의 적정성 강화	40	3.88	0.85
평가실행	부처 내 평가총괄기능 확대	40	3.68	0.89
	실무부서의 평가지원 강화	40	3.63	0.84
	평가위원회 합리적 운영	40	3.73	0.85
평가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40	3.60	1.08
	평가결과와의 사업 개선	40	3.98	0.89
	평가 인센티브 강화	40	4.10	0.81
	재정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40	3.93	0.92
	재정사업 모니터링 강화	40	3.73	0.93
	부진사업 컨설팅 강화	40	3.83	0.96

○ 한편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추가적 개선방안에 대한 개방형 의견제시에
아래 〈표 3-17〉와 같이 답변

〈표 3-17〉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추가적 개선방안

-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용 정보의 DB의 강화
-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하는 문제 개선 필요
- 다년간 집행되는 사업도 단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다보니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평가가 시급하거나 효과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적 시행
- 평가위원 다양한 분야(관련분야 외 경영, 회계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지적사항, 고견 등 종합의견 추가 필요

다. 부처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

○ 〈표 3-18〉을 보면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인식(평균 3.53)

- 재정사업 재원에 따른 심층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표 3-19>에 따르면 보조금(3.85)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기금(3.65)이 심층평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표 3-20>은 재정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역관광사업, 대규모 사업 등을 제시

〈표 3-18〉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 강화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 강화 필요성	40	3.53	1.01

〈표 3-19〉 재정사업 재원에 따른 심층평가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일반회계	40	3.40	0.93
기금	40	3.65	0.9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3.45	1.01
보조금	40	3.85	0.86

〈표 3-20〉 재정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역문화권조성사업, 지역축제 관련 지원사업 등
-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 100억 원 이상의 보조 사업들
- 창업 및 금융지원사업, 지역관광사업, 문화도시사업
- 템플스테이 지원
- 지역자원계정 관광개발사업
- 관광자원 개발사업
-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규모,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지역별 관광자원 관련 국비지원
- 5년 정도 지난 대규모 사업
- 문체부 자체 직접 사업보다 지자체 매칭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매우 필요, 아울러 보조사업 기관이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세밀한 평가가 더욱 요구됨
- 관광자원개발사업
- 국가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부문별 보조금사업

라.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

- 〈표 3-21〉를 보면,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인식(평균 3.55)

〈표 3-21〉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기구 운영 필요성	40	3.55	1.01

-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필요성에 대해 평가지원, 평가관리 부문 등으로 세부적으로 질문한 결과 〈표 3-22〉과 같으며 평가지원, 평가관리 부문 모두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의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평가지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3.83), 적격성 심사 및 기금운영평가(3.80),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원(3.75) 등을 지원하기를 원함
 - 평가관리 부문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3.90), 성과 부진과제 컨설팅(3.88), 평가지표 개선 등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3.88),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3.75) 순으로 지원해주기를 원함
 - 기타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3.83) 업무 지원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

〈표 3-22〉 재정사업 별도 전담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필요성

	세부질문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지원 관련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원	40	3.75	0.84
	재정사업 심층평가	40	3.83	0.93
	적격성 심사 및 기금운영평가	40	3.80	0.85
	기타 재정사업 평가	40	3.48	0.88
평가관리 관련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	40	3.75	0.90
	성과 부진과제 컨설팅	40	3.88	0.97
	평가지표 개선 등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	40	3.88	0.88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	3.90	0.84
기타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0	3.85	1.00
	성과관리 관련 토론회, 워크숍 개최	40	3.43	0.84
	기타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사업	40	3.33	0.86

마.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필요성

- 〈표 3-23〉에서 재정사업 평가 관련한 근거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문화 기본법과 같은 통합적 재정사업 평가근거 조항명시(55%), 법적 근거 필요없음(22.5%), 평가대상별로 개별법에 명시(20%), 기타 기존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지침으로 가능 의견이 있음

〈표 3-23〉 재정사업 평가 관련한 근거에 대한 관련법규 제정

세부질문	빈도(명)	퍼센트(%)
통합적 재정사업 평가근거 조항명시(예: 문화기본법 등)	22	55
평가대상별로 개별법에 명시(예: 관광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8	20
법적 근거 필요 없음	9	22.5
기타	1	2.5
합계	40	100

바.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관련 자유 의견

- <표 3-24>는 재정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 재정사업 평가에 있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평가들 간 연계를 통한 평가 작업의 피로도가 줄여지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가DB 구축 등의 의견이 있음

<표 3-24>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관련한 자유의견

- 재정사업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해 다른 보조금평가, 기금평가 등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하여 평가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지자체를 통해서 시행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위한 평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음 (평가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과 부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노력을 비교 시)
- 평가 종류가 지나치게 많음.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를 받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재부에서 조세연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평가의 경우는 관련 교수들의 평가의견에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시정할 필요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련 지침은 반드시 필요함
- 동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의거 당 해 년도 기본적인 평가 지침은 기재부에서 내려오며, 자체시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문화관광의 특이성으로 체계변경 필요성이 크다면 변경 가능
- 본 업무 수행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과외 업무처럼 되지 않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평가범위의 명확화 필요
-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자료관리 시스템화와 평가관련 DB누적관리 필요

제3절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특성상 체계적 관리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재정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5조2,578억 원에 달하며, 예산은 이 중 54.6%로서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기금은 45.4%를 차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은 3조8,192억 원('17년)으로서 전체 부처의 6.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부처임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재원이 다양하고, 보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재정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내 실무부서 중심의 자율평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평가는 근거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 평가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적격성 심사는 외부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담당관실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판정하고, 기금운용 평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중이 높은 관광부문 재정사업 평가는 선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에서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의 사전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사업 메타평가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모두 ‘보통’ 수준으로 ‘우수’와 ‘미흡’ 사이에 위치
 -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이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기획재정부 등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부처 자체평가과정의 충실도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 개선 필요 의견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5점 척도, 3점 보통)에서, 평가 설계와 평가 실행 자체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문화예술 등 사업별 특성화된 성과지표 개발 미흡 등 평가체계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됨
-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개선으로는 필요성이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나 (3.78) 재정 관리의 중요성 증가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내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3.53)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성 (3.85)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평가 지원기구 설립 필요성(3.55)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체계적인 평가관리시스템(3.90)을 갖추고 재정사업 심층평가(3.83), 컨설팅(3.88), 평가 관련 연구(3.88)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평가관련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77.5%)

제4장 ●●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 통합적 문화·관광 정책 성과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규모가 1조 1,518억 원('18년)에 달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 관리가 중시되고 있으나, 성과평가체계는 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등 한계를 지님
 - 재정 유형별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사업 평가체계에서는 재정구조 개선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어 개별사업의 개선에 직접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개별 부처 재정사업의 유형 및 개소수가 확대됨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보다는 상위 단위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고, 현장평가 등 사업별 다각적이고 객관적 평가 보다는 서면 중심, 사업 주관부서 중심의 기계적 평가 진행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실질적 사업 개선에 환류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평가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중간·사후 등 사업 단계별 관리, 특히 사업별 지속 관리가 중요하며, 기존 일률적 정량지표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체계 구축, 현장 평가·전문가 평가·수혜자 평가 등 다각적 평가제도 도입 등 개선 필요
-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영역을 범주화하여 정례적으로 평가하며, 다각적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처 자율평가 체계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05년 도입되었음
 - 4대 재정개혁이란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 이중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사업 성과지표 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 및 환류가 핵심적 내용임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의 개선과 직접 연계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음
 - 기획재정부(2017)에 따르면 자율평가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되어 부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평가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부처 자율평가를 명실상부한 자율평가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8년부터 시행중(기획재정부, 2017)
 - 부처 자율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메타평가를 폐지하며, 부처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
- 재정사업 자율 평가 등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부처 내 평가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평가구조가 확립되어야 함
 - 개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가 사업 내용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현행 자율 평가 방식인 결과 평가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요구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 문화·관광 재정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기획, 집행, 관리를 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은 38,192억 원('17년)으로서 전체 부처의 6.4%를 차지하며,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이어 5번째로 국고보조금이 많은 부처이며, 국고보조금중 자치단체 보조는 77.1%('15년) 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특회계 예산은 202,925백만 원('18년),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지특회계 예산은 437,743백만 원('18년)으로, 문화 재정사업의 28.4%, 관광 재정사업의 99.5%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집행·관리하는 체계이므로 정부의 사전 검증,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가 요구됨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부처 내에서 자체 평가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음
- 정부 업무의 지방이양 가속화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부처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임
 -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 진단·평가제도 등 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한국경제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2. 평가체계 개선 방향

□ 자율성: 부처 중심의 자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기존 재정당국 중심의 타율적 성과관리에서 해당 부처 중심의 자율적 성과관리로 기본적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부처 중심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체계화하고, 선제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선제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확립하여야 하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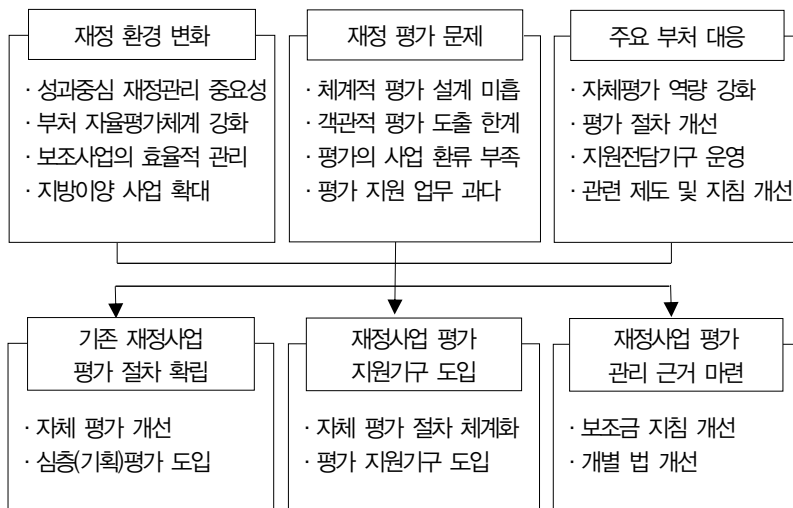
□ 효율성: 재정사업 평가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심층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 프로세스의 체계화는 평가와 관련한 행정 투입이 증가하고, 기존 운용중인 평가제도와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과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실무 부서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 부서의 기획 조정기능이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평가프로세스를 적정화, 효율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조직이 요구됨
- 재정사업 평가프로세스의 확립을 위해서는 평가근거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평가목적과 대상,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음

□ 효과성: 평가결과의 실질적 사업 환류체계 구축

- 현재 재정사업의 평가가 사후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면서 실제 사업 단위의 개선이 가능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사업군 별로 정례적인 심층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군 별 특색화된 성과지표 관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환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성과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그림 4-1]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향

3. 평가체계 개선 방안

□ 평가 체계의 고도화: 기존 재정사업 평가 절차 확립

-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체계화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효율화와 평가결과의 내실화를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성과관리계획이 단순한 사업평가 과정이 아닌 매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중 성과관리 방법이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완성도를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전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담당관 기능을 보강하고, 담당 실무부서와 함께 연중 성과관리 추진
 - 피평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체 평가 결과의 관대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외부 자체평가위원(분야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필요
-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사업군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형식으로 기획평가를 시행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
 - 매년 정부 우선 추진 과제나 부진 사업군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정례화 하여 시행함으로써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 개별사업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특성화하고, 현장평가 등 평가방식을 다각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각종 재정평가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 평가의 최소화, 평가 관리비용 절감 등 도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용역 형태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적격성 심사 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유사한 재정사업 평가는 축소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형식화를 지양

□ 평가 결과의 실효화: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 사업 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 평가 관리 요구
 - 실질적 평가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중심의 본 평가 이전에 실무적 사전 예비평가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내실화 도모
 - 평가 주체 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과 워크숍 등 준비단계 내실화로 원활한 사업평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강화된 제반 평가체계에 따라 제시된 사업평가 결과는 사업추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사업 환류 촉진
 -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필요시 컨설팅 과정을 통하여 후속조치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후속조치는 차년도 등 적정시기에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 현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나, 재정사업의 구체정보와 연계한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자체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고 평가 영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재정사업 평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에 요구되는 표준서식 및 관련 자료만 작성하고, 실제 평가는 평가 지원기구(평가위원)에서 전담함으로써 실무부서 부담 완화
 -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관리와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지원기구에서는 평가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위원회와 사업 주관 부서 간 소통을 강화

□ 평가 절차의 체계화: 재정사업 평가 관리 근거 마련

- 정책평가의 영역, 절차와 방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부처별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체계적인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절차, 후속조치 및 환류,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재정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평가 지원기구를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가 검토되어야 함
- 사업군 별 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는 개별 근거법에 명시하되, 전체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성 있게 추진하도록 설정
 - 문화·예술, 관광 등 분야별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중 특히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근거와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제시
-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평가를 통합하여 사업단위의 평가를 심층화·종합화 하되, 평가결과는 평가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체계화 도모
 - 사업별 평가지표를 특성화하고, 현재 각종 평가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하여 다각화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여러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중복성을 저감
 - 중장기적으로 재정사업의 평가와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하여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제2절

재정사업 평가 체계 정립

1. 필요성

-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효과 창출을 위하여 상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재정사업 관리체계 정립
 - 부처 차원의 자체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중복성을 저감하여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예측 행정이 가능하도록 재정사업 관리
 -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78로 나타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객관적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실제 사업 개선에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 거버넌스를 재정비
 - 부처별 정책사업의 자율적 성과관리와 증가하는 재정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평가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자체 평가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평가 결과가 보다 구체화, 객관화 되고 평가 과정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사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 기획하고, 심층 평가하여 사업 개선에 환류 함으로써 일상적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정립
 - 기존 재정사업 평가는 단위사업 위주 평가로서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층 평가는 내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

2. 추진방안

가. 자체평가 개선

- 자체평가는 단계별 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별 협력 동기를 부여하며,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체계 개선 (〈표 4-1〉 참고)
- 기존 재정담당관과 주관 부서 중심의 평가에서 평가위원회 기능 강화와 평가 지원기구 도입을 통하여 부처 중심 평가 역량을 강화
- 최초 단계인 성과관리계획을 내실화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무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강화

〈표 4-1〉 재정사업 자체평가 개선방향

구분	기존	개선
방향	주관 부서 중심 자율평가	부처 차원 자체평가+ 주관 부서 중심 자율평가
주체	재정주관 부서+실무부서	재정주관 부서+실무부서+지원전담기구
절차	본평가(평가위원회)	예비평가(지원전담기구)+ 본평가(평가위원회)
사후	사업 개선	사업 개선+모니터링+컨설팅

-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의 평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지원 업무를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는 부서별로 평가 전담인력을 두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평가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기초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

- 피평가자(보조사업자 등) 및 주관 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신청 및 기검토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평가 지원 기구에서 기초자료를 평가양식에 맞추어 기초보고서 작성
 - 사업주관 부서의 재정사업 평가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하여 우수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및 부서에 인센티브(승진 가점, 포상 등)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에서 주관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위원회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평가절차를 합리화하여 평가 추진
- 성과관리계획이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 현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재정사업별 성과지표는 지표 설정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부처 차원에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표에 대한 지속적 점검·개선으로 지표를 통한 실질적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담당 부서의 평가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본평가 이전에 예비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며 사전 논점을 파악
 - 개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개선 대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위원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평가위원회와 실무부서 간 간담회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평가 이후에는 대상사업의 주관 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주관 부서의 개선안 도출을 지원함

나. 심층(기획)평가 도입

1) 평가 대상

-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전체가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재정사업은 유형별로 예산사업(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과 기금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매년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일부(예: 10~20개)를 선정하되, 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사업(예: 지역문화 진흥,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을 평가 단위로 하며, 필요시 상위인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음
 - 기재부가 주관하는 핵심사업 평가와 심층평가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심층(기획)평가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 사업 개선 및 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업의 선정기준은 국정과제 연관 사업, 외부 문제제기 사업,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며, 사업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함
- 심층평가 도입 초기에는 예산사업의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심층평가를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자율적 관리를 위함인데, 다양한 외부 평가와의 중복성이 있는 가운데, 별도 평가과정에는 일정 행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직접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향후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정부

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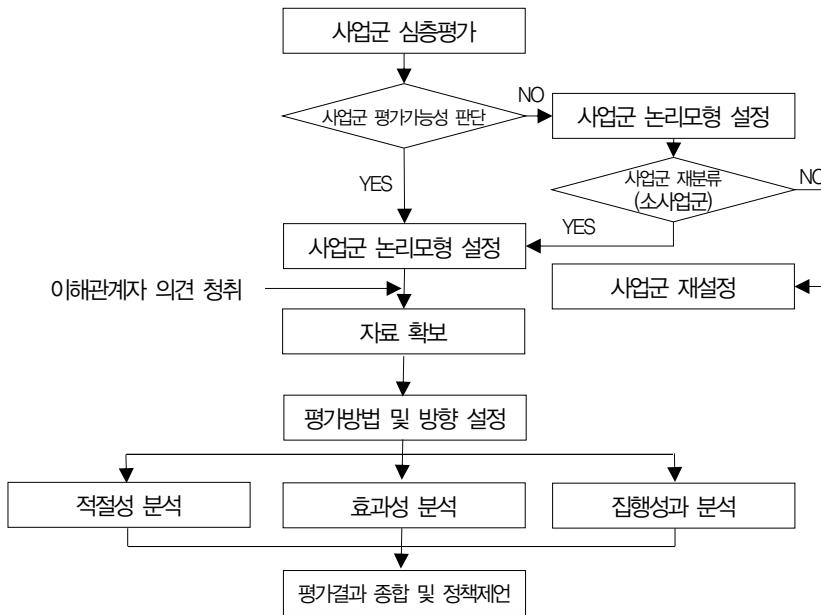
- 기금사업은 기존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체계 정립(문화체육관광부 내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임)

○ 사업은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 집행, 사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재정평가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재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후 단계 사업 위주로 평가

- 사후 단계 사업 평가란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 사업 집행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효과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변경 및 예산 차등 지원 등의 조치와 연동될 수 있음
- 심층평가 결과는 사후 평가 과정인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기금 운용평가에서 활용

2) 평가 방법

-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 따라 [그림 4-2]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한국개발연구원, 2013)
- 심층평가는 사업군의 평가가능성을 판단한 후 가능성이 확보되었다면 사업군의 논리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평가 방법 및 방향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함
- 적절성 분석은 사업의 정부개입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며, 효과성 분석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 성과 분석은 인과논리 검토, 집행체계 분석, 정책 수정 노력 분석을 수행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

[그림 4-2] 심층(기획)평가 흐름도

- 평가 분석 이후,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사업의 개선 및 성과 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함
 - 평가결과 종합은 적절성 분석 결과, 정부개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원인과 개선, 효과성 및 집행성과 분석 결과, 효율성 및 효과성 결여 원인과 개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심층평가 결과는 사업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 규모 변경, 성과지표 개선 등을 제언함으로써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함

제3절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 도입

1. 필요성

□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기구 도입

-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관리체계라는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자체평가 지원, 심층평가 형식의 기획평가 지원, 평가결과 모니터링, 부진과제 컨설팅, 관련 평가지표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를 위해서는 지원기구 도입이 요구됨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재정사업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안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별도 연구용역 등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 내 실무부서의 기존 평가과정 부담이 큰 실정에서 다수의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결과 DB 구축,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지원기구가 요구됨
 - 재정사업 평가 결과 환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해당 전문가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 형성 등 평가 결과의 객관화가 요구됨
 - 재정사업 평가 별도 전담지원기구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55로 나타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 지원 기능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에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기구를 도입하여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함

2. 추진방안

가. 지원기구의 역할

1) 주요 업무

- 지원기구의 기본적 운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부처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인지, 부서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표 4-2>와 같이, 부처 자체 평가에 중점을 둘 경우, 지원기구는 재정부서 지원을 위주로, 부서 자율 평가에 중점을 둘 경우, 지원기구는 사업주관 부서 지원을 위주로 업무범위가 설정할 수 있음

〈표 4-2〉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지원 방식

방안	내용
재정부서 지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부서에서는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자율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실무부서의 자료를 기초로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를 시행 - 지원기구는 실무지원단의 역할을 담당하여 평가과정 전반을 기획·관리하며, 예비평가 등을 통하여 실무지원단의 의사결정을 지원
실무부서 지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부서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문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실무부서 평가결과를 객관화하며 전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조정·확정 - 지원기구는 부서 평가수행 시 평가지침 제공, 평가위원회 참여, 부서별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실무부서를 지원하며 전체 평가위원회 평가를 지원

- 재정부서 지원 중심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이에 따른 부처 차원에서의 합리적 재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부처 전체의 평가관리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실무부서 지원 중심은 자율 평가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 개선에서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재정부서 지원 중심은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평가의 주체가

외부이므로 사업 개선의 적극성이 낮으며, 실무부서 지원 중심은 부서별 상대평가 등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이러한 장단점에 따라 기존 실무부서 지원 중심에서 실무 지원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재정부서 중심으로 전환

○ 지원기구의 업무 범위는 <표 4-3>과 같이 평가 지원, 평가 결과 관리,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3>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업무 내용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원 - 재정사업 심층평가 - 적격성 심사 및 기금운영평가 - 기타 재정사업 평가
평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 - 성과 부진과제 컨설팅 - 평가지표 개선 등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 -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성과관리 관련 토론회·워크숍 개최 - 기타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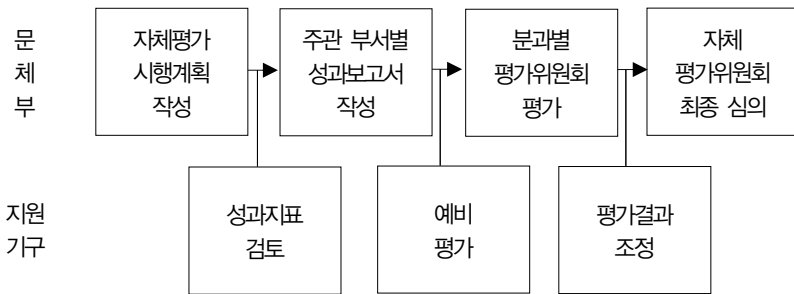
○ 평가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를 지원기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것임

-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원: 국가재정법 제8조에 의해 시행하는 자체 평가의 문화체육관광부 본평가 이전 예비평가 시행
- 재정사업 심층평가: 성과 제고가 요구되는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
- 적격성 심사 및 기금운영 평가: 소관부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의한 적격성 심사와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영 평가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를 지원하거나 직접 평가 시행
- 평가 관리는 평가 기획에서 결과 까지 성과평가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주요 재정사업(보조사업) 모니터링: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추진에 반영되는지와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
 - 성과 부진사업 컨설팅: 성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부진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사업시행주체에 지원
 -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 평가지표 검토 및 개발 등 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별 계획, 집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사업 이력 관리 및 실적 관리 효율화

2)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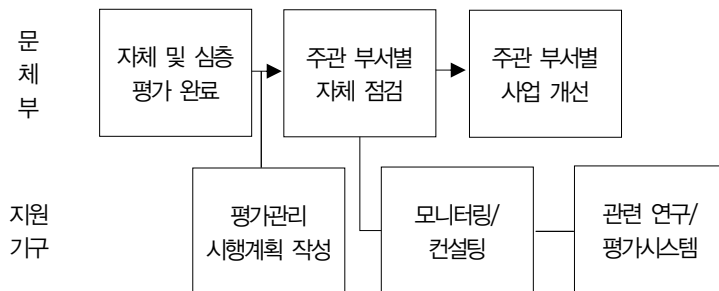
- ‘평가 지원’ 업무 중 재정사업 통합평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체 시행하던 통합평가를 [그림 4-3]과 같이 지원기구와 역할 분담하여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내 재정사업별 소관부서에서 통합재정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면, 재정담당관은 평가 지원기구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여 예비평가를 실시
 - 실무지원단에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평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시 추가적 자료를 요청하여 본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
 - 본평가는 각 분과위원회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필요시)를 시행하고 2차적으로 대면평가를 통하여 분과위원회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



[그림 4-3] 재정사업 자체평가 지원 흐름도

○ ‘평가 관리’ 업무는 [그림 4-4]와 같이 자체 및 심층 평가 결과를 실제적인 개선과 연계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컨설팅, 연구 등을 통하여 시행

- 자체 및 심층 평가 결과가 완료되면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개선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방안을 컨설팅 하여 사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그림 4-4] 재정사업 평가관리 흐름도

나. 지원기구의 운영 형태

-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는 운영 효율성과 기존 운영사례를 감안할 때, 별도 법인 설치와 기존 조직 활용, 두 가지 대안을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첫 번째 대안은 재정사업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인 재단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인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있음
 - 두 번째 대안은 기존 조직에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있음
 - 이외에도 지원기구를 부처 내에 두는 방법과 특정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매년 적정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음
- 재정사업 평가를 전담하는 사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8년 현재, 4본부, 6단, 3그룹, 1실, 2센터,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혁신기술본부의 평가지원단에는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지역사업평가센터와 산업기술 R&D를 지원하는 R&D지원센터가 있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초 재단법인(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설립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특별법인으로 개편되었으며, 환경정책연구와 환경영향평가 수행, 두 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함. '18년 현재, 7부, 1본부, 2센터 체계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평가본부는 4개 실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사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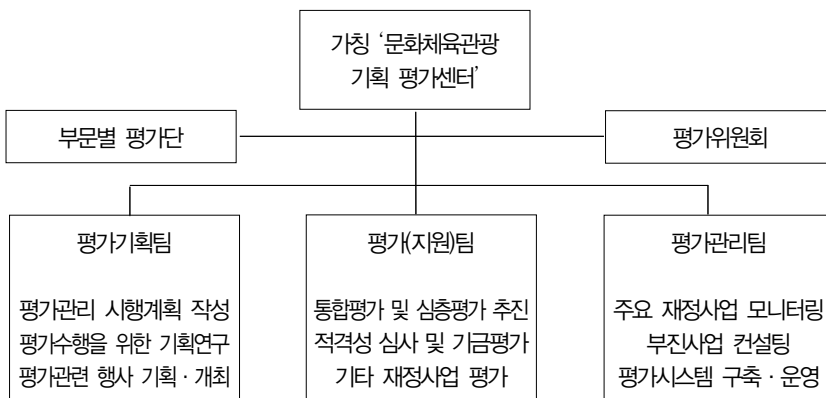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에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실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에서 통합재정사업보고서의 검토와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관리센터에 부처 자체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표 4-4>와 같이 두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별도 법인 설립안은 평가기능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설립을 위하여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 및 별도 예산 확보 등 많은 절차가 요구됨
 - 기존 조직 활용안은 이에 비해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나, 평가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 평가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체계화를 이루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임

〈표 4-4〉 재정사업 평가 지원기구의 대안별 비교

조직 대안	장점	단점
별도 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의 평가영역을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평가 영역에 대응이 원활하고 평가영역을 신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 - 평가기능 완결성을 위하여 평가범위가 과다하게 확대될 가능성 - 기존 기관과 평가기능 중복 가능성
기존 조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직의 인력을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어 조직 설립이 용이 - 기존 조직의 업무와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독립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별도 법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에 따라 업무비중 변동 가능성

다. 지원기구의 조직 구성

- 지원기구(가칭 ‘문화체육관광 기획 평가센터’)는 [그림 4-5]와 같이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등 외부 지원 조직과 평가기획팀, 평가(지원)팀, 평가관리팀 등 평가 지원을 수행하는 내부 전담 조직으로 구성
- 평가단은 문화체육관광 재정사업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문화예술분과, 문화콘텐츠산업분과, 관광산업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재정분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지원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위하여 평가기획 및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
 - 평가기획팀은 평가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며, 계획 및 예산 확보, 외부 기관 협조, 관련 행사 개최, 관련 연구 수행 등 담당
 - 평가(지원)팀은 적격성 심사 등 독자적으로 평가를 추진하거나, 자체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를 지원
 - 평가관리팀은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결과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컨설팅하며,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함



[그림 4-5] 재정사업 지원기구 조직 구성

제4절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마련

1. 필요성

□ 재정사업 평가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에 걸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로서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에서 부처별 국고보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 지침에 평가와 관련한 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지침과 별도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 운영 필요
 - 재정사업 중에서도 문화영향평가(문화기본법)와 같이 독립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평가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함
 - 기 운영중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 평가의 경우 사업평가 근거가 없어, 평가결과의 반영과 평가절차 실행에 한계 노정
 -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75.0%가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

2. 추진방안

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와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사업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 부처별로 운영되는 지침은 상위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면서 부처 내 업무 특성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표 4-5>과 같이 ① 보조사업(자) 선정, ② 보조사업 집행관리, ③ 보조사업 사후관리, ④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로 구성

<표 4-5>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내용

구분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2015.11.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2016.9.30.)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7.8.24.)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18.1.3.)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18.4.18.)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18.5.10.)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	○	×	×	×	×	×
보조사업(자) 선정	○	○	○	○	○	○
보조사업 집행관리	○	○	○	○	○	○
보조사업 사후관리	○	○	○	○	×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	○	○	○	○

- 지침은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보조사업 선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결정(보조사업자 선정), 제4조 보조사업의 수행(보조사업 집행관리), 제5조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6장 보칙(보조사업 사후관리)과 부합함
-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는 보조사업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임
-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평가단을 실무부서별(전문가 참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적 방식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요구됨

〈표 4-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사업시행지침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실무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 편성, 공모,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사업의 안내, 신청 검토,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 검토, 사업신청서의 심사,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장 예산 편성	-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심사, 전담자문문제, 시범사업 실시,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제6장 집행관리	- 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 배정, 보조금 교부결정,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집행, 실적보고 및 검증, 농식품사업자금의 확정, 이월, 반납, 용자조건의 결정, 대여 및 대출 실행
제7장 사후관리	- 사업의 관리책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자원제한 행정처분,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장 평가 및 환류	- 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자율평가계획 수립, 자율평가 절차, 후속조치, 환류, 재정사업 평가 대응, 모니터링, 전담기관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표 4-6>와 같이 재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14년 1. 1.)·운용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어 타 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영·지침과 동일한 근거에 의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관리의 전반적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73호로서, 9장 100조로 구성되어 있음

〈표 4-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평가 및 환류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평가원칙	-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 사업 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자체평가 실시
자율평가계획 수립	-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확정
자율평가대상 선정	-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중 자율평가 대상 선정
자율평가 절차	- 사전교육→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 제출→자체평가위원회 사업별 평가→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자체평가위원회 재평가→평가결과 취합 및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자율평가 후속조치	-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 및 지출구조조정 등 한류계획 마련,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자율평가결과 환류	- 자율평가 결과를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예산편성 방향 제시에 반영
재정사업 평가 대응	-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시 사업부서에서는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자율평가결과 공개	- 자율평가 결과 외부 공개
모니터링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등 모니터링
전담기관 활용	-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 4-7>와 같이 재정사업 평가 및 환류와 관련하여 타 부처 지침 보다 더욱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지침 내 별도의 장으로 운용하고 있음
 - 주로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자율평가의 형식적 수행을 지양하고 재정사업 평가의 전반적 과정과 사후 관리까지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동 지침에는 농식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15. 6. 30)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재정사업 ‘평가와 환류’라는 ‘장’을 신설하여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평가와 환류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와 평가결과가 해당 재정사업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
 - 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자율평가계획 수립, 자율평가 절차, 후속 조치, 환류, 재정사업 평가 대응, 모니터링, 전담기관 활용 등

나. 개별법 개선

-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개별법에서 강조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명시된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지자체 이양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 재정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내 평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표 4-8>과 같이 관광특구, 도서관, 문화영향평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경우에만 대상과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기금은 평가에 관한 근거(법 제3조)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이 법에 명시적인 성과 평가 규정은 없음

〈표 4-8〉 문화체육관광 평가 관련 주요 제도 현황

관련 법	평가 조항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 관광특구 평가(제73조)	- 문화체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
	- 지역축제 평가(제48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시행
도서관법	- 도서관 운영평가(제12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 평가(제3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 평가
문화기본법	- 문화영향평가(제5조)	-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 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12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 평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중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부문별 모법에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 성과관리를 도모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주요 법률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 근거를 추가
 - 관광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평가 근거를 제시(문화체육관광부, 2018a)
 -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해당 주요 재정사업의 세부 실태 평가와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기준과 활용방식에서 차별화하여야 함
- 국토부에서는 '13년 하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5)
-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계획의 집행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음
 -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전평가로서 지역개발계획의 검증 보고서 평가, 기반시설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집행평가로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사업의 집행결과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도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은 무엇인지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 지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정할 수

-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도 필요
- 문화지구 지정은 지자체장이 정하고 2년마다 집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필요
 - 관광자원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 관광자원개발은 관광(단)지·문화·생태녹색·광역권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의 관광 관련 사업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져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각종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침 제9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계획·설계·중간시행·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장 ●●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의 내실화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평가체계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체계 현황을 살펴보았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는 단계별로 사전, 집행, 사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단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적격성 심사 등, 사후단계는 재정사업 통합평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금 운용평가 등이 해당함
- 이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적격성 심사와 재정사업 통합평가, 기금 운용평가이며, 이외의 평가 제도는 기재부와 재정 평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큰 흐름은 부처 자체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재정사업 개선을 유도하는 것인데, '18년부터 재정사업 통합평가 중 메타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명실상부한 부처 주도의 자율평가 제도로 변경되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17년 기준 3.8조원, 부처 순위 5위), 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앙부처가 현재의 보조체계와는 다른 역할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의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담당조직의 1차 평가를 거쳐 자체평가위원회(8인)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평가 체계는 담당부서 자율평가 중심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나 근본적 개선 대책 강구가 어렵고, 체크리스트 방식의 양적 평가 위주로 사업별 질적 개선 대안 제시와 환류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타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부처 재정사업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가 거버넌스 정립, 심층평가 영역 선제 발굴, 평가지원 전담기관 운영, 관련 지침 운영, 관련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음
- 부처별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지원 전담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토지주택연구원에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부내 재정사업 중 일정기간 평가 미실시, 해당 부서의 수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사업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심층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있는데, '17년에는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통합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검토와 예비평가 및 분과별 평가위원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재정 성과와 관련한 연구와 계획, 평가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등 개별 부처에서는 재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는 달리 재정사업 평가 절차나 성과관리 전담기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지역개발사업 등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평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4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 강화 필요성은 5점 척도(3점-보통)에 3.78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심층평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3.53,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3.55 등 보통 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 근거 법규는 75.0%의 전문가가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전문가조사 결과,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보통(3점)과 높음(4점)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 응답 결과와 연관하여 판단해 볼 때, 평가체계 자체의 한계점과 관련성 있음
- 이러한 재정 관리 환경 변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부처별 평가 현황을 살펴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평가는 부처 중심의 자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재정사업 평가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 평가결과의 실질적 사업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가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평가과정을 적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별도로 평가 기획, 심층평가하여 사업 개선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내 평가 내실화와 체계화, 사업담당부서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평가지원 기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체평가 지원, 심층평가 시행, 평가결과 환류,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함
-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서 기존 지침에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근거를 개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향후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직접적인 방안 외에도 다양한 연관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정부 성과평가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부터 다양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중복을 저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재정당국의 평가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상향하여 거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단위 및 세부 사업의 미시적 성과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이원화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함
- 현실적인 평가체계 운용상의 어려움은 부처 내 평가업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인데, 재정사업 평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평가담당자의 전문직제를 검토하고, 평가대상을 축소하며, 적절한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평가체계의 운용에서는 예산 집행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dBrain, 중앙재정관리시스템)와 지방자치단체(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타 부처의 사례와 타분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한 결과물로서,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체제 개선 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2018), 201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 국민체육진흥공단(2018.8.7.),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 국무조정실(2008),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
- 국무조정실(2018),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국토교통부(2015),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
- 국토교통부(2018),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국토연구원(2018.8.9.), <http://www.krihs.re.kr/>.
- 국회예산정책처(2016),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 권오성(2016),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2017a), 2018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
- 기획재정부(2017b),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 기획재정부(2017c), 주요 핵심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 김미복·황의식·임지은(2014), 농림사업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 김성진·박주영(2013),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호정(2017),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노화준(2008), 정책평가론, 법문사.
- 농림축산식품부(2001), 200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18.8.8.),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류호상(2013), 「산림청 자체평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산림청.

-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2018a),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7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 박노옥(2015), 「조세재정 브리프 제19호-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노옥·오영민·원종학(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보건복지부(2016),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평가체계 개발 연구.
-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보건복지부(2018b),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성주군 등 28곳, 상·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2017.12.11.), 「환경부 보도자료」, 2
- 오영민(2017), 「조세재정 브리프 제58호-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오윤섭·강지원·이규환(2017), 「통합재정사업 업무 개선 및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승현·윤기웅·공동성(2015), 「재정사업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 분석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 윤수재(2016),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미홍, 김륜희, 변완희, 김경진(2015),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이윤식(2011),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이재원(2018), 「2.19 지방분권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과제」, [전문가 간담회] 지방분권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2017.09.28.), 「기획재정부보도자료」, 5.
- 조공장·서아람(2016),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 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자은·김향자(201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지주택연구원(2018), 2017년 연구결과 요약집.
- 한국경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자료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 한국개발연구원(201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지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8.1.), <https://www.khealth.or.kr/kps>.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a),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b), 농식품정책성과관리 전담기관 업무수행 계획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a), 2016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종합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9.22.),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8.7.), <http://www.arko.or.kr/main.d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지방자치 포커스 제97호-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동향 및 개선방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현황과 과제.
- 홍종현(2015),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환경부(2017), 2017년도 자체평가 계획.

2. 법률 및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제2017-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훈령 제14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예규 제12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49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14.1.13. 개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2014.1.13. 제정).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018-5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훈령 제177호).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법률 제15598호).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9호).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97호).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7호).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247호).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6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638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5339호).
 환경부.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237호)

ABSTRACT

Improvement Plans on Evaluation Systems of the Financial Programs in Culture and tourism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ministries in South Korea. It aims particularly at enhancing the efficiency in governmental financial expenditure as well as at strengthening the operation of financial systems in the ministry.

The evaluation system of financial programs generally consists of the four phases such as pre-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and post-implementation. To specifically illustrate the pre- and post-implementation phases, first, the pre-implementation phase includes preliminary feasibility tests, evaluations on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grams, and examinations of eligibility. Second, the post-implementation phase is constituted by the integrated evaluation on financial programs, operation evaluations on state-budget-aid programs, and evaluations on fund manag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s above mention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ke charge particularly of examinations of eligibility, integrated evaluations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grams, and evaluations on fund management, whil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other relevant rating research institutions take charge of the remainder programs.

The major directiona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s of financial programs

rests on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competency of each ministry toward the end of autonomous enhancement of program evaluation as well as performance per se. It was not until the year 2018, the system of meta-evaluation was abolished from the evaluation package of the integrated evaluation of financial programs. Upon the abolishment, the whole evaluation system was shifted toward the autonomous evaluation orientation by the ministries.

On the other hand, the new role was getting being charged up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in evaluation systems as the transfer of the authorities and functions from the central departments to the local governments was accelerated, and as the rate of subsidized programs which were undertaken by the ministry was fairly high (i.e. the total 3.8 trillion KRW as of 2017, ranking the fifth among the departments).

The autonomous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conducted by a series of consecutive phases, such as the first evaluation by a self-evaluation committee (8 persons), the written evaluation by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into the three grades (i.e. Excellent, Moderate, and Inadequate). If a result falls into the category of inadequate, it will be subject to expenditure restructuring.

So far, the financial evalu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difficulty in securing objectivity and/or improving relevance in terms of measurements as the autonomous evaluation orientation prevails. Also, because the evaluations were based on checklist-type methods, alternative solutions explorations throughout the evaluation processes and feedbacks have been structurally constrained.

The issues mentioned above have also been found in other ministries, so the efforts for competency enhancement were mad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governance, the discovery of in-depth evaluation areas, the operation of evaluation support institutions,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guidelines, and the conduct of academic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specific center within the research institutions was generally witnessed as evidenc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d the Land & housing Institut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utonomous in-depth evaluations is being carried out each year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of the relevant departments, the necessity of objective performance appraisal by the external agencies. And the 7 programs were evaluated in the year 2017.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is a working group for supporting the evaluation processes in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group takes charge of reviewing evaluation reports of the integrated financial program, supporting preliminary evaluations, and facilitating committee operations. And the institute as a whole is geared toward the integrated supporting functions including research, planning, and evaluation itself.

To manage the financial affairs systematically, each department,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uns on Government Grants Oper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Unlike Basic Rules for the Management of the Financial Busines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Sector, there is no statement in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evaluation processes of financial programs and the designation standards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the projects requiring a high priority of evaluation such as local development programs, the evaluation standards were clearly presented in the Local Development and Support Act.

In view of the changes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nd the status of evaluation processes in each department, it is fair to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evaluation systems autonomously led by each department, the enhancement of evaluation processes focusing on financial programs, and the improvement of substantial feedback loop of evaluation results on program implementations.

First, in order to build autonomou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evaluation governance should be reorganized and the evaluation process should also be appropriately revised. It aims at strengthening the feedback loop from evaluation results to program evaluations so that, of the financial programs in the ministry, the program calling for intense care is able to be taken care of more intensely.

Second, to improve the evaluation and systematization 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Letters, and to alleviate the evaluation burde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project, the evaluation support organization will be designated and operated to support self assessment, implementation of in-depth evaluation, return evaluation result,

Third, in order to achiev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is necessary to add the rules about evaluations and feedbacks onto the existing guidelines, and to prepare a new law as to primary financial programs regarding evaluation logistics.

(Future Tasks)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re efforts need to be considered and carried out in addition to the tasks suggested above.

Although the study particularly looked at the evaluation system of financial programs, it is required to reducing the duplication of evaluation activities as a variety of evaluation programs are operating redundantly (e.g.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 evaluation by the fiscal department should focus on macro-level performance through being upgraded to the program-level, while other evaluation programs such as detailed programs should focus instead on micro-level. An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evaluation of detailed programs need to be transferred to each department, so that the accuracy and accountability of the department can be enhanced in the long run.

The realistic difficulty in operating evaluation systems lies in the fact that a great deal of manpower and time need to be put into the tasks. Therefore, in order to alleviate the evaluation burden,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professional requirement for evaluation staffs from generalist to specialist, to reduce the size and scope of the evaluation subjects, and to enhance proper supports and incentives.

The budget execution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As, currently, the budget execu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finance business is divid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 (dBrain, centr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e-government, local financ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way to coordinate the two separate systems.

It is advised that this current study is somewhat far from complete as there is a rarity in terms of preceding research 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fore, further research and, accordingly,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current study are needed so that the relevance and feasibility of the study will be able to get enhanced through a series of consecutive future studies.

부 록 ●●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위한 전문가 조사

본 설문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평가체계 설정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 김영준 선임연구위원 (02-2669-8547)

박종웅 부연구위원 (02-2669-9825)

※ 이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통합평가와 관련한 조사입니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란 각 부처의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입니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는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이루어집니다.

I.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실태

[문 1] 평가설계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성과관리계획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⑤
2	선정 기준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지표 항목 구성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4	평가지표 적용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5	평가과정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문 2] 평가실행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평가위원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	평가지침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지원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4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①	②	③	④	⑤

[문 3] 평가관리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평가결과의 사업 반영 정도	①	②	③	④	⑤
2	사업모니터링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평가관리지원DB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4	인센티브 제공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제도적 근거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문 4]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문 5]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재정사업 자체평가 역량강화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 6-8번의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관리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6] 평가계획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성과관리 계획수립의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2	평가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①	②	③	④	⑤
3	성과지표의 적정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 7] 평가실행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부처 내 평가총괄기능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실무부서의 평가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위원회 합리적 운영	①	②	③	④	⑤

[문 8] 평가관리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제도적 근거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평가결과의 사업 개선	①	②	③	④	⑤
3	평가 인센티브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재정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재정사업 모니터링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부진사업 컨설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 9]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I. 부처 자율 심층평가 필요성

[문 10] (기존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 외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재정사업 자체 심층평가 강화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문 11]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중 아래 자원별로 심층평가의 필요성은 어떠합니까?

	세부질문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⑤
2	기금	①	②	③	④	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①	②	③	④	⑤
4	보조금	①	②	③	④	⑤

[문 12]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중 별도의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 문화도시,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IV.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설립 필요성

[문 13] 문화체육관광부의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기구 운영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 14-16번에서 별도의 전담 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오.

[문 14] 별도의 전담 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평가지원 관련)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재정사업 통합평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재정사업 심층평가	①	②	③	④	⑤
3	적격성 심사 및 기금운영평가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재정사업 평가	①	②	③	④	⑤

[문 15] 별도의 전담 지원 기구 운영 시 업무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평가관리 관련)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2	성과 부진과제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지표 개선 등 재정사업 평가 관련 연구	①	②	③	④	⑤
4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문 16] 별도의 전담 지원 기구 운영시 업무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기타 관련)

세부질문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2	성과관리 관련 토론회, 워크숍 개최	①	②	③	④	⑤
3	기타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사업	①	②	③	④	⑤

V. 재정사업 평가 근거 제도 필요성

[문 17]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근거를 관련 법규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질문	
1	통합적 재정사업 평가근거 조항 명시(예: 문화기본법 등)
2	평가대상별로 개별법에 명시(예: 관광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	법적 근거 필요 없음
4	기타

VI. 자유 의견

[문 18]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VII. 일반 사항

[문 19]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앙부처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공공기관
- ④ 연구기관
- ⑤ 학계
- ⑥ 업계

[문 20] 귀하의 문화관광 영역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10년)

(년)

[문 21]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자 하오니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지 않으신 경우 빈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영 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종 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남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정 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문화·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8년 10월 31일

발 행 일 2018년 10월 31일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732-7 93300

